



2015. 3.

충남 복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합 동 토 론 회



충청남도

목 차

I. 국가의 복지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보건복지부 이상진 기획조정담당관)	3
II. 민선5기 충남 복지정책 진단 및 민선6기 과제 (공주대 이재완 교수)	33
IV. 충남의 복지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저출산고령화정책과 한치흠 과장)	53
V. 저출산·고령화정책 문제와 충남의 대응방안 (충남발전연구원 김용현 책임연구원)	105
VI. 저소득·취약계층정책 문제와 충남의 대응방안 (충남대학교 류진석 교수)	123

세부진행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13:40~14:00	20'	◦ 참석자 등록	
14:00~14:05	5'	◦ 개회 및 주요참석자 소개	사회 : 권경주 교수
14:05~14:10	5'	◦ 개회사	충남발전연구원장
14:10~14:15	5'	◦ 인사말씀	도지사
		< 제 1 섹션 >	
14:15~14:40	25'	◦ 기조발제 1(보건복지부) - 국가의 복지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보건복지부 이상진 기획조정담당관
14:40~15:05	25'	◦ 기조발제 2(공주대) - 민선5기 충남 복지정책 진단 및 민선6기 과제	공주대 이재완 교수
15:05~15:25	20'	◦ 기조발제 3(충청남도) - 충남의 복지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한치흠 과장
15:25~15:40	15'	◦ 휴 식	
		< 제 2 섹션 >	
15:40~16:05	25'	◦ 저출산고령화정책 문제와 충남의 대응방안	충남발전연구원 김용현 책임연구원
16:05~16:30	25'	◦ 저소득취약계층정책 문제와 충남의 대응방안	충남대학교 류진석 교수
16:30~17:30	60'	◦ 종합토론 및 정리	충남발전연구원장 도 복지보건국장
17:30~		◦ 만찬(구내식당)	

충청남도



충남 복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합동토론회

국가의 복지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보건복지부 이상진 기획조정담당관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형복지”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보건복지 정책 추진방향



순서

I.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주소

II. 최근 복지정책 환경

III. 보건복지 정책 방향

IV. 2015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I.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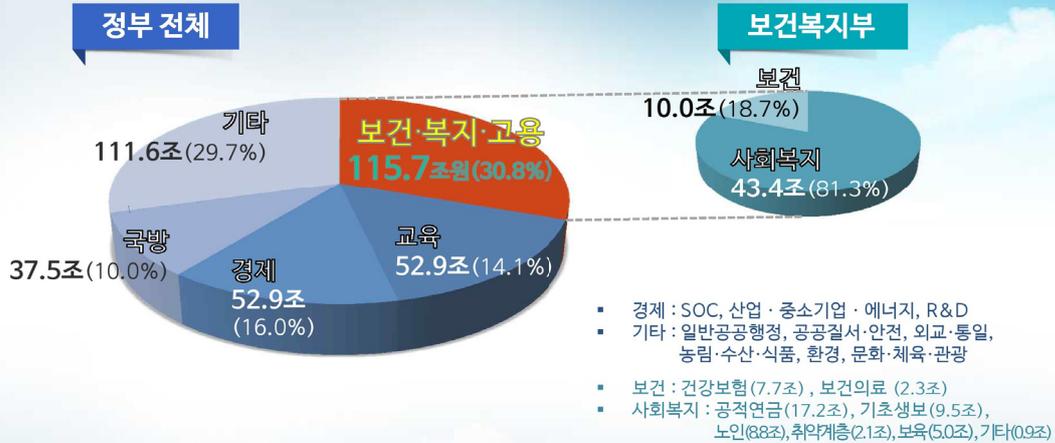
1. 복지재정

복지예산은 정부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1993년 국방 추월, 2004년 경제 추월, 격차도 더욱 확대 추세
- 2015년 복지예산 115.7조원, 총예산의 30% 최초 돌파

(참고) 정부예산 12대 분야 자원배분



- 정부 총 예산은 **375.4조원**
-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115.7조원 (정부전체 30.8%)**
- 보건복지부 총 예산은 **53.5조원 (정부전체 14.3%)**

1. 복지재정

GDP 대비 복지지출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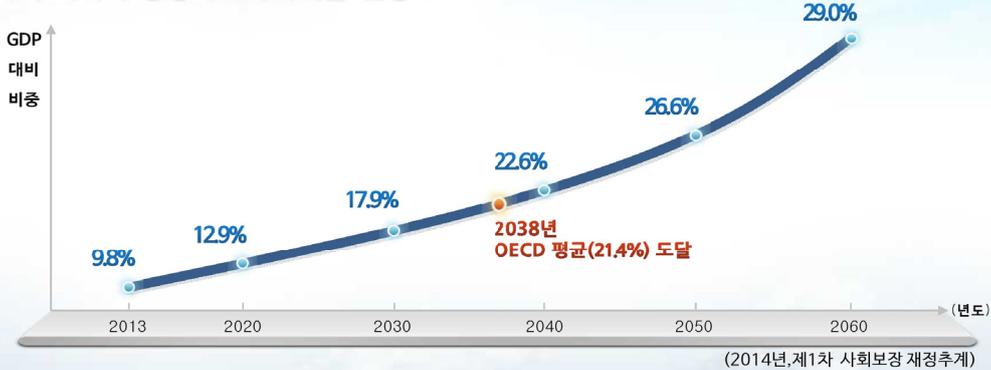
- 단순 비교시 **OECD 평균의 42%** (美의 1/2, 獨의 1/3) 수준
- 제도성숙도와 고령화를 고려시 **선진국과 단순비교는 어려움**

* 연금제도 성숙도 반영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약 2%p 상승

1. 복지재정

그러나 증가속도는 매우 빠른 상황

<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전망 >



- 현 추세 유지시 2033년 미국, 2038년 OECD 평균 수준 도달
 - 복지지출 증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에 기인
- * 고령화사회(7%) → 고령사회(14%) 도달기간 : 佛115년, 美73년, 獨40년, 日24년, 韓17년

(참고) 2006~14년 저출산·고령화 투자



- 지난 9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총 122.9조원 투입
- 저출산 66.6조, 고령화 43.2조, 성장동력 13.3조원 배분

2. 복지제도

사회보장의 기본 틀은 완비, 수혜자는 부족

1차 사회안전망 (5대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 ('77년~, '89년 전국민 확대)
- 국민연금 ('88년~, '99년 전국민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 ('64년~, '00년 1인 이상 사업장 확대)
- 고용보험 ('95년~, '98년 1인 이상 사업장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 ('08년~)

2차 사회안전망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아동·장애인 돌봄 등 (전자바우처 '07년~)
- 긴급복지제도 ('06년~)

3차 사회안전망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00년~)
- 의료급여제도 ('77년~)
- 기초노령연금 ('08~'14년), 기초연금 ('14년~)
- 장애인연금 ('10년~)

- 비교적 단기간에 대상별, 생애주기별 각종 복지제도 도입
- 다만, 사회보장제도 미성숙, 낮은 적용범위 등으로 위기 대응능력 미흡

* 새로운 복지수요 및 국민 불안에 대한 종합적 대응에 한계

(참고) 지난 5년간 주요 변화

복지예산 (2011) 86.4조 → **(2015) 115.7조** (5년간 연평균 증가율 7.6%, 정부전체 5.0%)

대상자 (2011) 1,249만명 → (2013) 1,352만명 → **(2015) 1,604만명**

사회 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긴급복지 확대('09, '12)
- 장애인연금 도입('10)·확대('14)
- 행복e음 구축('10)
- 장애인 활동지원 도입('11)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11~'14, 7천명)
-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12)

국민 건강

-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12)
-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시행('12)
- 권역외상센터 도입('13)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13~'17)
- 3대 비급여 제도 개선('14~'17)
-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면무료('14)
- 담뱃값 인상('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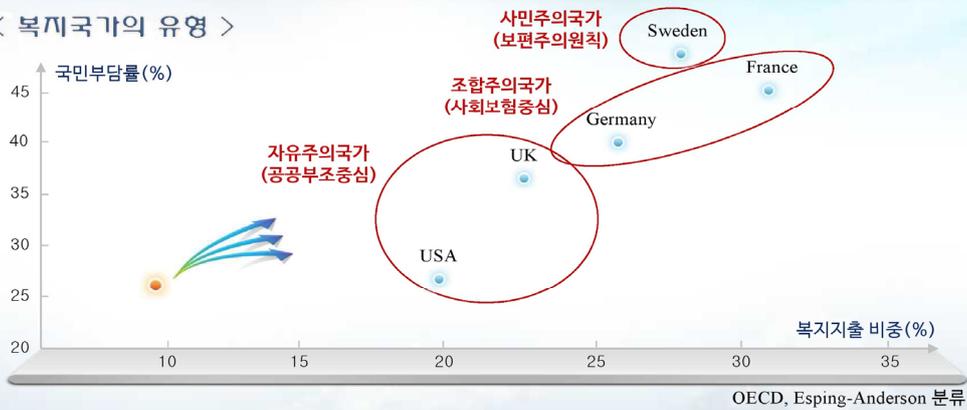
저출산·고령화

- 제2차 기본계획 수립('10)
- 노후긴급자금 대부 시행('12)
- 5세 누리과정 도입('12)
- 0~5세 무상보육 실시('13)
-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14)
- 기초연금 도입('14)
-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14)

3. 복지정책의 현주소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이행기로 접어드는 단계

< 복지국가의 유형 >



튼튼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복지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고,
 촘촘한 맞춤형 복지로 **국민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시점

II. 최근 복지정책 환경



1. 복지정책의 수요



왜 지금 복지인가?

서민·중산층 생활	사회 결속력	인구 및 가족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구조 성숙으로 성장 둔화 자영업·서비스업 비중 증가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최고의 자살률 경제수준에 비해 낮은 행복도 복지욕구 분출과 이해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증가 여성경제활동 증가

복지 = 서민생활안정 + 사회통합 + 미래성장동력

1. 복지정책의 수요



경제성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기제 약화

경제규모 대비 낮은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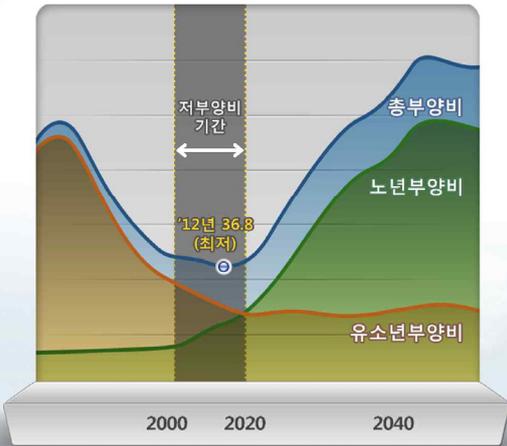
높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



1. 복지정책의 수요

인구구조 변동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



저출산·고령화의 파급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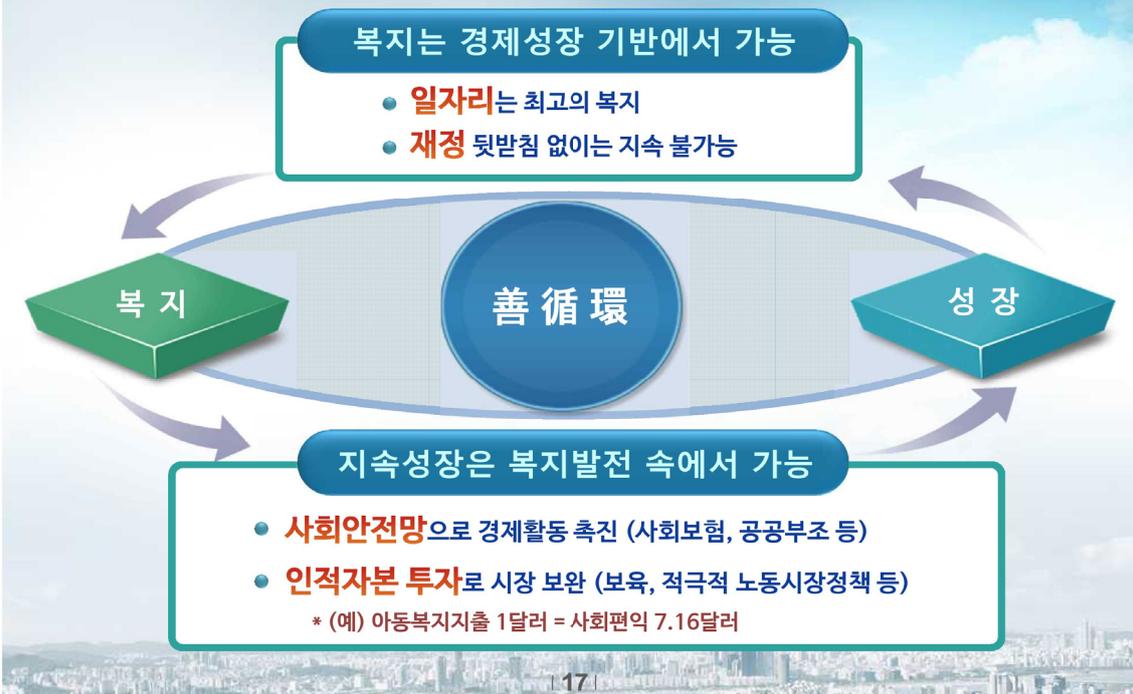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 감소 → 잠재성장률 하락
 - 3.66% (2015) → 1.43% (2050)
- 노인인구 증가 → 지속가능성 위기
 -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환('21)
 - 군 병력 8.4 만명 부족('30)
 - 건강보험 적자 47.7조원('30)
 - 국민연금 적립금 수지적자('44)
- 사회구조 변화 → 교육, 주택, 국방, 금융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구조적 영향

2. 복지국가의 딜레마



해결에 실패할 경우
 성장동력 약화, 사회통합 지연,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국가, 가족, 기업, 사회, 국민 모두에 악영향

3. 복지와 성장의 선 순환



4. 최근 선진국 동향

PIGS 국가 재정위기

- 저성장 & 세수기반 취약
- 복지지출 과다
- 대외수지 불균형 조절기능 약화

➔ **저부담 · 고복지**는 지속 불가능

선진국의 복지개혁 동향

- **영국(1) : 복지정책 개혁안 발표** ('12.6월)
 - * 복지급여수준 총액 제한
 - * 수급조건으로 근로 의무 강화 등
- **프랑스 : 연금개혁** ('10.10월)
 - * 정년상향, 연금수급연령 연장, 납입기간 연장
 - * 전국적으로 연금개혁 반대시위 촉발
- **스웨덴 : 레인펠트 복지개혁** ('06~'14년)
 - * '일하는 스웨덴' 캐치프레이즈
 - * 과도한 실업수당 일부 개선 등
- **영국(2) : 민간 자원 활용강화** ('12.8월)
 - * 저소득층 생계유지 지원 예산 삭감
 - * 민간 비영리기관(푸드뱅크) 역할 확대

일본, 침체된 은퇴대국

- 생산가능인구 1998년부터 감소
- 높은 국가채무비율 & 저성장 지속
- 사회보장 지출 증가로 부담

➔ **고령사회의 사회像** 암시

Ⅲ. 보건복지 정책 방향



1. 문제인식

현행 복지제도 및 전달체계의 한계

복지제도 문제

- **현행 제도는 서구 복지국가모델 지향**
 - 과거 산업사회를 배경으로 설계
(정규직 남성근로자, 현금급여 중심)
- **21세기 정책환경과 부조화**
 - 비정규직,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
 - 이에 따라 선진국도 복지개혁 중
-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불충분**

전달체계 문제

- **단기간에 선진국 주요 제도를 도입**
 - 복지에산도 빠르게 증가
- **그러나, 각개약진(各個躍進)식 확대**
 - 부문별, 제도별 분절
- **국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낮은 구조**
 - 단순한 양적 확대는 지속 불가능
(비효율 누적 + 국민 조세저항)

2. 한국형 복지국가의 비전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시행(14.8월)

핵심 가치

맞춤형 고용-복지

사회보장체계의 운영원칙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균형

세대간, 계층간
부담의
형평성 확보

대상자 선정 및
급여기준의
공정성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

핵심 전략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미래세대 지원 (임신·출산, 양육, 아동 등)
 - 가계부담 경감 (의료, 주거, 생활비)
 - 노후생활 보장 (소득, 건강, 안전, 사회참여)
 - 맞춤지원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업인, 가족)
-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청년, 여성, 중장년, 근로빈곤층의 고용-복지 연계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 효율적 제도운영, 정보시스템, 재정 안정
 -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3. 보건복지 정책 체계도



Ⅳ. 2015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1. 생애맞춤형 건강사회 실현
2.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보장
3.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행복



1. 생애맞춤형 건강사회 실현

환자의 높은 비용부담

✓ 보장성 강화해도 환자부담 여전

	2006년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64.5%	63.0%
비급여 본인부담	13.4%	17.2%

- 여성(54.2%), 청장년층(56.6%) 등 성·연령별 보장성 격차 발생

✓ 국민의료비 중 높은 개인부담률(*12)



만성질환자 증가

• 고혈압 환자 수



• 당뇨병 환자 수



- ✓ 평균수명 81.3세 vs 건강수명 70.7세(*11)

1. 생애맞춤형 건강사회 실현



열악한 공공의료 인프라

필수의료서비스 부족

병원이 1개 이하인 시군구	36개
분만산부인과 없는 시군구	46개
응급의학전문의 없는 군	45개

10만명당 응급전문의수



보건산업의 유망성

보건산업 세계시장



타산업 세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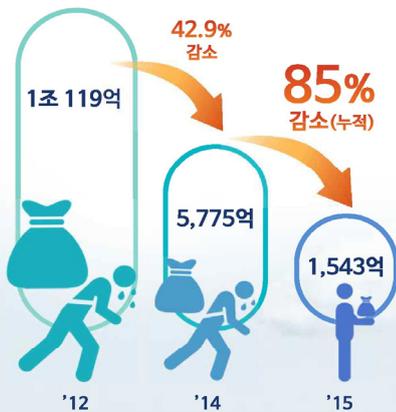
✓ 삼성전자 165조 매출, 16만명 고용
 vs 아산병원 1조, 1만명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전면 보험 적용

비급여 환자 부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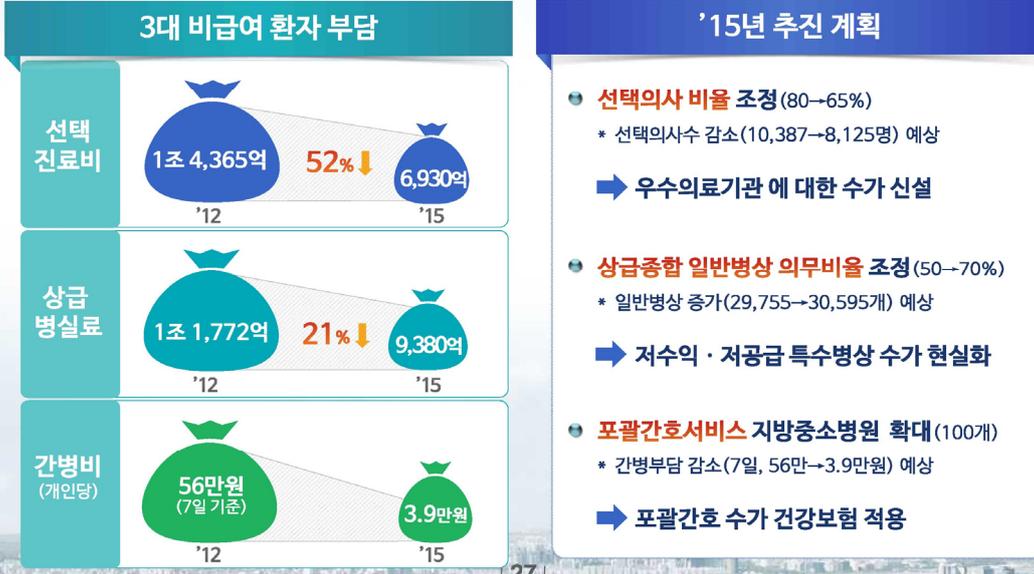
'15년 추진 계획

- 고가 항암제 · 치료법, 첨단 필수검사 등 203항목 급여 확대**
 * 방사선 치료, 유방재건술, 암환자 유전자검사, 소아크론병치료제, 항진균제 등
-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산정특례 대상 확대**
 - 급성기 중증 뇌혈관·심장질환자 특례 확대
 - **극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 희귀질환자의 포괄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마련**
 * 희귀의약품, 임상연구 단계 의약품, 특수 치료재료 등 사용에 따른 의료비 경감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으로 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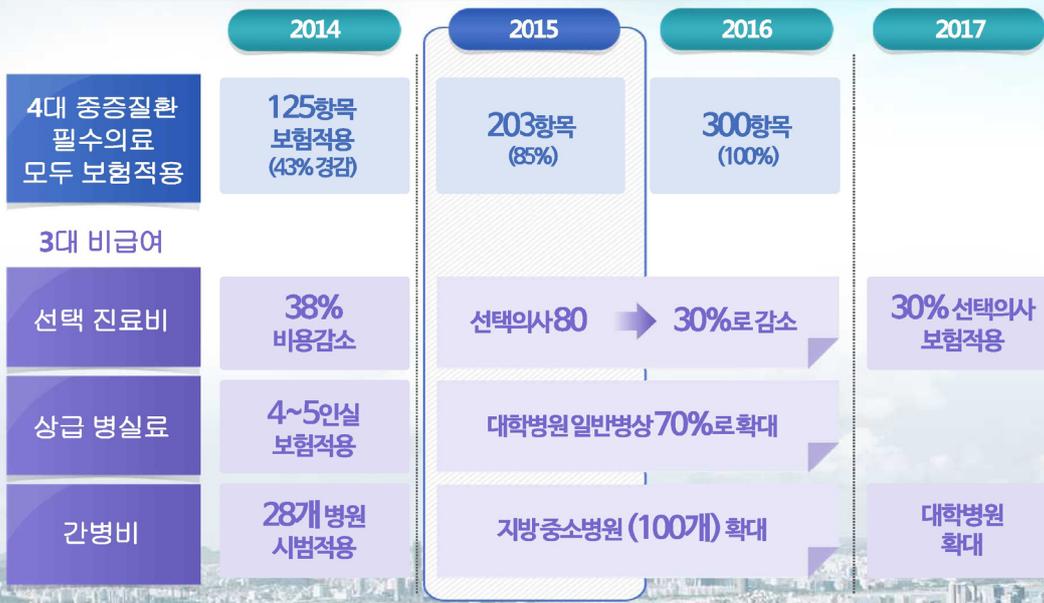


27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17년까지 제도 개선 차질없이 이행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생애주기 필수 의료비 부담 경감

	임신·출산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년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산모 부담 경감 임신성 당뇨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아당뇨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연치료 고혈압, 당뇨 등 통합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스피스 완화의료 독감예방 무료접종
2016 ~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 집중치료 선천성기형 진단·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치치료 정신질환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비만 정신질환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 검사·치료 임플란트(65세)

건강보험 중기('14~'18)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15.2월)

1-2. 의료이용시 국민편의 제고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권역응급센터	응급인프라 확충	의료취약지 해소
<p>센터수</p> <p>19개 (2013) → 20개 (2014) → 41개 (2015)</p>		<p>거점의료기관</p> <p>11개 (2013) → 26개 (2014) → 32개 (20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응급센터 확충 확대(20→41개소) *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1h)내 도달 센터 인력·장비 보강, 응급수가 개선, 현장 응급차량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실 위탁운영 및 닥터헬기(4→6개) 권역의상센터 확충(12→14개소) * 24h 응급수술 가능한 중증외상 치료시설 (17년 17개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확대 * 분만 12, 외래 13, 순회진료 5, 소아 2('15) 지역거점 공공병원(38개소) 시설·장비 보강 지원

1-2. 의료이용시 국민편의 제고

원격의료 · 응급협진 본격 도입

원격의료 시범사업 본격 확산

동네의원

- 참여기관 확대 (9 → 50개)
- 마을회관 · 경로당 등 활용

부처간 협업을 통한 확산

협업

- 국방부** 격오지 부대 등 (50개소)
- 해수부** 원양선박 (5척 시범사업)
- 법무부** 교정시설 (27 → 29개)

의료인간 원격협진 활성화

의료인

- 대도시 거점병원-취약지 응급실
※ 광주-전남 모델 전국 확산
- 대형병원-의원간 원격협진

원양선박 모델



응급실 협진 모델



1-3.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성인남성 흡연율 5%p 감소 목표



맞춤형 금연지원

- 담뭏값 인상·강력한 비가격정책·금연치료 등 **금연 종합대책 발표**(14.9월)
- 건강증진부담금 비중 확대 (14.2→18.7%)
- 확보된 재원은 금연치료, 흡연예방 등 흡연자 지원에 활용

가격 정책

» 담뭏값 **2,000원 인상** (15.1.1)

건강증진부담금 **354→841원**



비가격 정책

- » 담뭏값 **경고그림 표기**
- » 모든 음식점(15.1.1), 당구장 등 **금연구역 확대**
- » 금연 **공익광고·캠페인 확대**
- » 신종담배 **건강위해성 교육·홍보**

1-3.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건강수명 1세 연장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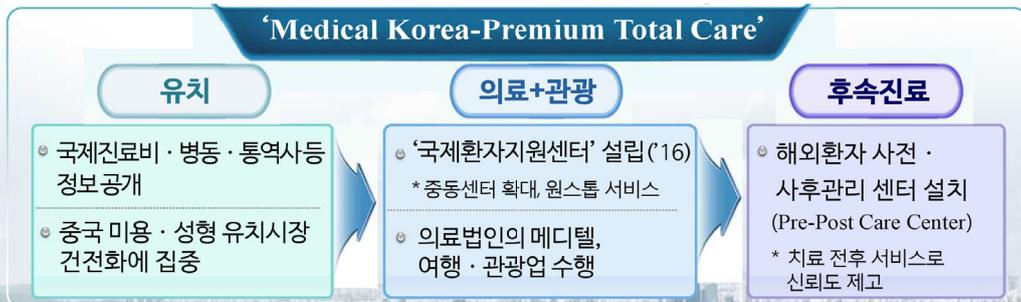


맞춤형 금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뱃값 인상·강력한 비가격정책·금연치료 등 금연 종합대책 발표(14.9월) 건강증진부담금 비중 확대 (14.2→18.7%) 확보되는 재원은 금연치료, 흡연예방 등 흡연자 지원에 활용
건강생활 실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터 중심 건강증진사업 확대 ※ 학교, 아파트, 경로당 건강사업 확대 공공장소 음주·주류 판매 금지 근로자 건강센터 확충 (15→20개)
만성질환 예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고위험군 암 검진 확대 ※ 자궁경부암, 간암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치료 연계 동네의원 고혈압·당뇨 관리 강화
신종감염병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볼라 등 감염병 국제공조 강화 ※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서울회의 (9월) 고위험병원체 실험실 가동 (11월)

1-4. 보건의료 세계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

보건의료의 세계진출 가속화

해외환자 유치(25만 → 32만명)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125 → 13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 '유치·서비스·후속진료' 전주기 지원 중개수수료 적정화 등 유치시장 건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진출+정보시스템+계약등' 패키지 수출 정책펀드 조성(4천억원) 및 의료면허 인정 간소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조기입법화 및 자법인 설립 확대	



1-4. 보건의료 세계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

보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지원

보건의료 R&D 전략적 투자

- 유전체·줄기세포 등 투자 확대 (3년간 400억원)
- 연구중심병원 투자 확대 (100억→170억원)
- R&D 전략회의를 통한 성과지향적 관리 강화

의약품·의료기기 글로벌화 지원

- 글로벌 임상시험 혁신센터 운영 (6월)
- 제약산업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신흥국 G2G 협력으로 인허가 간소화 지원

첨단제품 임상·연구 기반 강화 및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

보건의료 세계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일자리 **3.8만개**, 부가가치 **2조원**, 수출 **8.6조원** 달성

2.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보장

저소득층

✓ 상대적 빈곤율 증가



✓ 여전히 낮은 탈수급률



장애인

✓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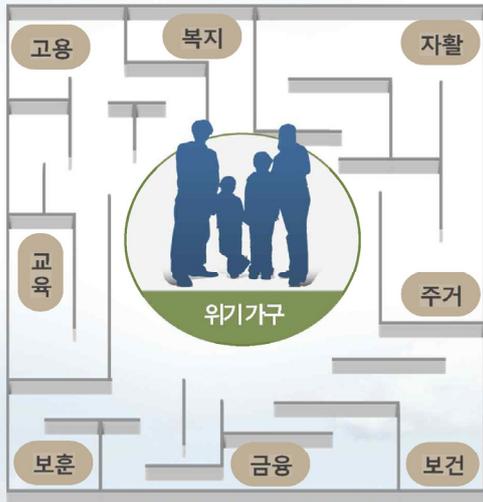
✓ 발달장애인의 인권문제 발생

*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2.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보장

칸막이로 인한 국민불편과 낮은 체감도



복지깎때기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 복지사업 증가 / 기준 복잡
- 복지인력 부족
- 국민들은 통합서비스 요구



2-1.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차질없는 시행

맞춤형 급여로 개선



지원 확대



-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로 반영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2-1.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맞춤형 장애인 서비스 제공

장애등급제 시범사업

- 의학적 기준외 **장애인육구** 등을 고려하도록 설계

발달장애인법 시행('15.11월)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 **통합센터** 및 하위법령 마련

수요 기반의
정책으로 전환

중증장애인 돌봄

- 활동지원 대상 **장애 3급**까지 확대 (575백명)
- **응급안전서비스** 확대 (76백명)

생활 편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하위법령 제정 (국토부와 공동부령)

2-2.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 » **'복지로' 포털, 129 콜센터 활성화**
 - 본인 또는 이웃 신청, 온라인 상담
 -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안내
- »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전국확대**
 - 복지 통·이장 (9.4만명), 좋은이웃들 (2만명)
 - 읍면동 민관협의체 (8만명)
- » **위기가구 주기적 모니터링**
 - 단전·단수 가구,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



필요한 도움을 빈틈없이 지원

- » **복지서비스 + 일자리 연계 강화**
 - 고용 복지* 센터 확대, 정보연계 강화
 - 기초수급자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 » **현장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 일시적 위기: 긴급복지 2배 확대 (15.6만건)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98만 가구)
- » **다양한 민간자원 확충·연계**
 - 기금은행, 기부연금(나눔기본법 제정) 도입
 - 공동모금회, 종교단체, 지역기업 등



사회서비스 단일카드 통합 (국민행복카드)

2-2.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중앙) 사회보장정책 총괄·조정 강화

통합·연계 강화

- 수요자 중심 사업 연계
- 맞춤형 통합서비스 설계

복지사업 표준화

- 선정기준 단순화
- 국민이 알기 쉬운 서비스

사회보장
위원회

사회보장 재정·통계

- 중장기 재정추계 실시
- 사회보장 통계 체계적 관리

위원장 : 국무총리
12개 관계부처 참석

중복·누락방지

-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
- 유사·중복사업 정비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시행('14.8)

(참고)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체계도

비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정책목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확대
-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 공적 연금 재정안정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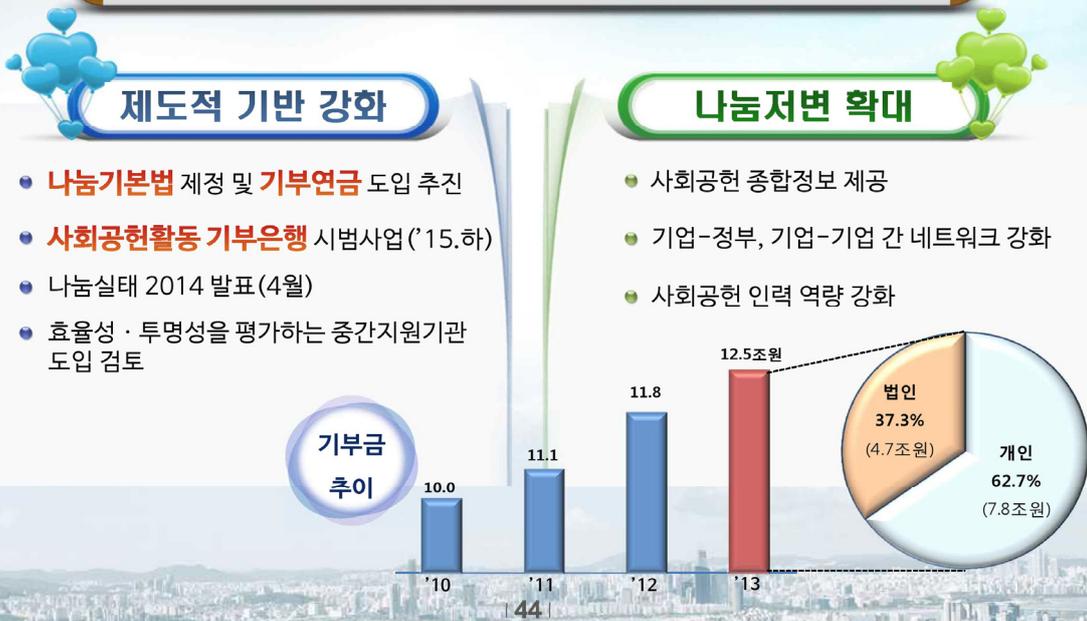
2-2.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지역) 주민센터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2-2.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민간) 나눔의 사회적 실천 확산 및 제도화



2-3. 복지재정 관리 강화

복지재정 낭비 및 유사·중복 방지

복지재정 누수 방지

국민신고 상설화	시스템으로 원천 차단	현장조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로' 포털 익명 신고 신설 신고 포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사실 공유 강화 (13 → 17개 기관 연계) 지자체 조사주기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조사 확대 및 전담조직 가동 허위청구병원 특별조사

누수방지 강화
5,000억 원 이상
절감 추진

유사·중복사업 정비 (사회보장위원회)

	정비방향	정비안 마련 (2~4월)	적용 (5~12월)
중앙사업 (36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통합 서비스연계 	제도조정소위 실태분석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부처별 실행 ↓ '16년 예산 반영
지방사업	실태조사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6월) → 지자체 이행 → 평가·지원 연계		

3.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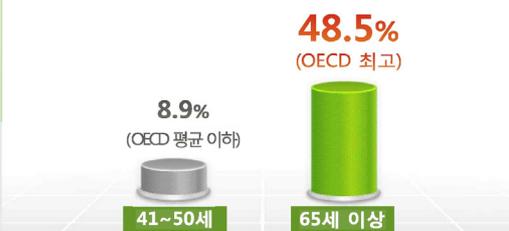
합계출산율 추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 (14)



노인빈곤율 (12)



치매노인 증가



3-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천만이 참여하는 기본계획 수립

4대 분야 정부-민간 공동분과위원회



- 정책대상별현장의견 청취및 토론 (3, 7월)
- 릴레이 정책간담회 (여성, 경제, 노동, 종교, 교육, 언론계등)
- 지역사회정책제안대회 (3월)
- 5천만이함께만드는 온라인 소통창구운영 (2월~)



3-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3차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지속 발전 사회 구현



3-2. 모든 아동이 행복할 여건 조성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범정부 지원 강화

임신·양육 부담 완화

-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단가 인상 (180만→190만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10월, 45천명)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7월, 9천명)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확대

- 12~36개월 소아 A형 2회 무료접종 시행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 적정 서비스·인력기준, 공공 산후조리원 등 정책방향 마련
- 산후조리원 안전·감염관리 종합대책 수립
 - * 층수 제한(2층 이하), 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등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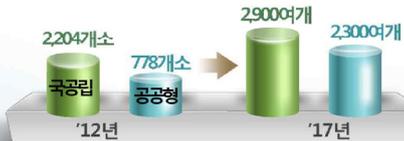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 아동기념일과 연계, 아동관련 공익캠페인 전개
 - * 어린이날, 입양의날, 세계아동의 날 등

3-3. 보육지원 내실화

양적확대에서 질 높은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

믿을 수 있고 질 높은 환경

- ✓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 * 수요자 중심 평가, 평가등급제 도입 등
- ✓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 * 국공립 기업 기부채납 활성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등 병행추진
- ✓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
 - * 소방 등 안전정보 공시 강화, 안전컨설팅 도입 등



실수요 중심 맞춤형 지원

- ✓ 가정양육을 보완하는 시간제 보육 확대
 - * 97개 → 230개소
- ✓ 다양한시간대(야간, 휴일등) 보육서비스 확대
 - * 국공립·공공형 중심 시간연장 보육, 24h 보육 등
- ✓ 입소대관리시스템 개선
 - * 아동별 신청 개소수상한 설정, 입소아동의 타 어린이집 대기신청 자동삭제 등



3-3. 보육지원 내실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수립·이행

아동학대 강력처벌

- 학대발생 '즉시' 시설 폐쇄·행위자 자격정지
- 학대 교사·원장 영구퇴출
-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신고포상금 강화 등)
-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별점검 (경찰청 협조)

CCTV 등 안전장치 확충

-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 부모의 CCTV 영상 열람권 제도화
- 정보공시 강화 (학대예방교육, CCTV 설치 여부)

부모참여 활성화

- 평가인증시 부모참여 강화
- 부모에게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보급
- 아동학대 안전인증제 도입

보육교사 자격요건 대폭강화

- 교사양성체계 강화 (실습·대면학습 등)
- 보조교사·대체교사 확충
- 보육교사 대상 정서·심리상담 제공

3-4.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강화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노인 건강 지원

틀니·임플란트 (7월)

75→70세 이상 보험확대
(263만 → 450만명)

독감 (10월)

65세 이상 무료접종
(470만 → 540만명)

인공무릎관절 수술 (7월)

65세 이상 수술비 지원
(1,900명)

치매예방 및 지원 강화

치매예방 실천

- 중장년까지 수칙(33) 홍보강화
- 복지관, 요양시설 등 운동법 확산

치매 전문시설 확대

- 요양시설 치매 전담실 운영
-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

- 치매가족 휴가제 내실화
- 가족상담 전문서비스 제공

'제3차 치매관리기본계획' 수립 ('15.9월)

3-5. 노후소득 보장 강화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및 돌봄 강화



사회 참여

- 일자리 31만 → 34만개
- 취업·창업 지원
- 취약노인 돌봄 참여
- 자원봉사·재능나눔 지원



Active aging

독거 노인

- (공공) 안부·안전확인
 - (민간) 기업 결원·후원
- 45만명 보호
(소외된 독거노인의 75%)

학대 노인

- 학대노인 전문양로시설 지정·운영('15.3월)
- 학대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27→29개소)

3-5. 노후소득 보장 강화

현세대·노인세대 모두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

기초연금

필요한 어르신께 빠짐없이 지원

기초연금 탈락자가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 재 신청 없이 기초연금 지급

433만명



464만명



국민연금

기금 500조 시대에 걸맞은 관리운영체계 마련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책임성 강화

→ 국민 신뢰 및 지속가능성 제고

수익률 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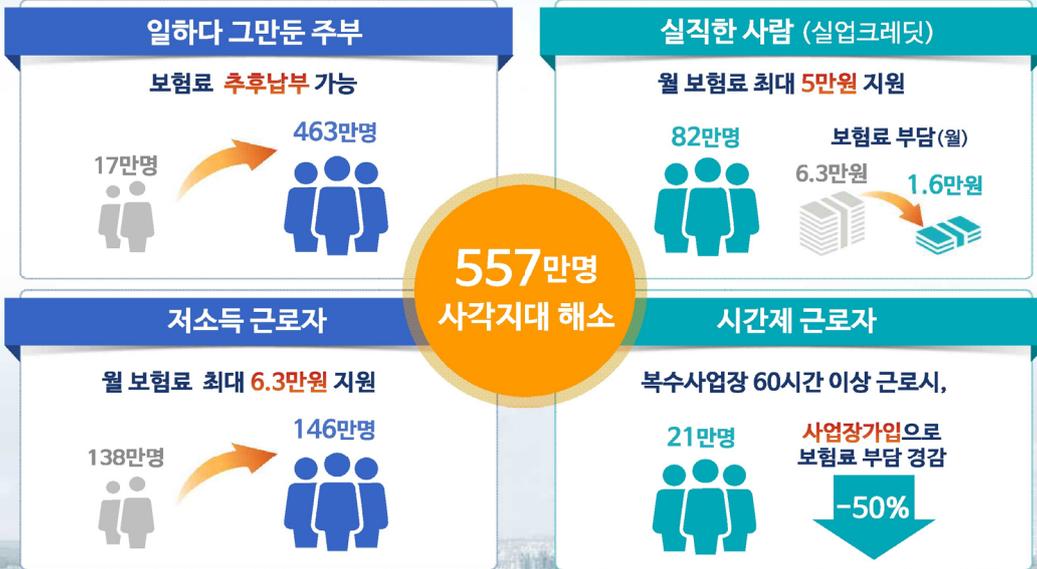
보험료율 2.5%p



3-5.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55 |



한명한명 건강혜택
방방곳곳 복지혜택



감사합니다

| 56 |

충청남도



충남 복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합동토론회

민선5기 충남 복지정책 진단 및 민선6기 과제

공주대 이재완 교수

민선5기 충남 복지정책 진단 및 민선6기 과제

이재완(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론

- 2010년 6월 2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통해 충남도는 안희정 후보가 당선되어 민선5기 지방정부가 출범하였고, 지난 2014년 6월 4일 선거를 통해 안희정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당시 안희정 후보는 선거운동과정에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의 슬로건으로 “사람사는 세상, 행복충남”을 실현할 것을 도민에게 약속함.
 - 이러한 안희정 후보의 복지철학은 좌와 우의 이념이 아닌 인간중심의 철학에 기초한 것임.
 - 현재 시대적 과제를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양극화, 귀촌/귀농에 두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시
 - 이러한 면모는 과거 투쟁적, 이념적 사고의 틀이 아닌 개방적, 합리적 사고에 기반한 실사구시·생활중심의 복지의제 설정과 참여와 소통의 민주적 리더쉽의 발현임.
 - 안희정 후보의 복지정향은 기존의 토건형 지역개발의제보다 무상급식과 맞춤형복지 등 사람중심, 생활의제 중심의 공약 강조.
- 이러한 복지정책의 철학과 기초를 바탕으로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의 복지도정을 실현하고 있음. 특히 민선6기 복지정책은 이전의 민선5기에 비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강조.
- 지난 민선6기 지방선거당시 공약을 정리하여 민선6기 충남도정의 방향을 설정한 내용을 보면 소위 3+3으로 지칭되는 3대 혁신과 3대 행복과제 제시.
 -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제기된 정책과 기존의 민선5기 정책과제와 상호융합 및 연속성을 기반으로 설정.
 - 즉, 3대 혁신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가는 행정혁신,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혁신, 그리고 농어촌에 희망 주는 3농혁신임.
 - 또한 3대 행복과제는 자영업에서 기업까지 행복한 성장,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행복할 권리, 도랑에서 서해까지 행복한 환경임
- 이러한 3대 혁신과 3대 행복과제는 크게 보아 도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으로 광의의 사회 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본고에서는 복지공약으로 제시된 정책 중에 구체적으로 충남도 복지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민선5기 4년을 진단하고 민선6기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II. 복지정책의 기조와 방향

- 민선 5기와 6기의 충남복지정책의 기조와 방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시임.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패러다임 설정은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욕구와 문제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정책방향 표현
 - 즉, 예산이나 환경적 제약에 따른 상황에 맞추는 정책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부적절한 문제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 실시임.
 - 물론 현재 지방자치하에서 예산과 인력 등 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
- 그러나 지방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복지의 과제를 지역의 관점과 전국적 수준의 문제해결전망을 견지하여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의 상호융합과 조정의 필요성 제기됨
 - 지역의 복지문제해결이 단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성공이란 의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발전시키는 주요한 토대임. 소위 ‘복지의 지역화’를 통해 전국적 차원으로 복지정책 확대와 밑에서부터 변화를 추동해 나갈 수 있음.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표현되는 충남도의 복지정책의 비전은 모든 도민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생애주기별에 나타나는 비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제적, 예방적,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행복한 사회의 실현임.
- 민선5기 복지정책의 기조아래 구체적인 정책은 4년을 거치는 동안 확장되고 구체화 됨.
 - 즉, 민선5기 출범당시 기조는 충남도가 지향하는 복지정책의 목표설정을 제시하고, 몇 개의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실시로 나타남.
 - 이것이 지난 4년을 거쳐 민선6기 1차년도에 이르는 동안 복지정책의 지역성, 보편성, 참신성(창의성), 효과성, 효율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제고되고 확장됨.
- 민선5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부터 민선6기에는 ‘생애주기별 행복할 권리 보장’이라는 복지권의 보장으로 정책기조 명확히 함.
 -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조례) 마련과 제도 정비 그리고 광역지자체로서의 역할과 기능 정립.
 -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양의 확대와 함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복지기반/인프라 구축) 확충.
 - 민선6기 도정방향은 공약과 민선5기 계속사업 그리고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 재편하여 3대 혁신과 3대 행복과제로 집약하고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행복할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표 1> 민선5기/ 민선6기 복지정책의 기초와 방향

민선5기	민선6기			
	공약	복지계획	보건의료계획	민선6기 도정방향 (민선6기 4개년 계획)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생애주기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복지 실시	따뜻한 복지, 행복한 충남	도민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충남	아이에서 어른신까지 행복할 권리
-OECD선진국 평균복지수준으로 가는 충남 - 참여복지체계의 과학화, 효율화 -일자리와 함께 가는 복지	- 보건복지예산의 지속적 확충 -지역단위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의 컨트롤 타워기능 수행 -사회적 경제적 자립 보장 및 사회적 통합의 복지사회 구현	-복지권 증진 -복지서비스 향상 -복지기반 확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공정과 신뢰, 인권과 정의의 가치를 높이는 도정 수행 -생명보호, 환경적·사회적 건전성 유지에 최선의 노력 -시혜관점이 아닌 권리보장 관점의 복지정책 -생명과 인권이 우선하고 인간다운 삶이 제대로 보장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
-충남복지재단 설립 운영 - 영유아무상보육확대 -행복경로당 조성 운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등	-생애맞춤형 복지실시 -행복키움지원단 운영활성화 -광역치매센터, 자활센터 운영 -사회복지종합회관 건립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	-자립지원강화 -공동체의식 향상 -사각지대해소 위한 서비스 확대 -서비스 역량강화 -복지인프라 확대 -연계협력증진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와 건강증진서비스 강화 -감염성 질환관리 -정신보건서비스 향상 -건강지원 환경조성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지역사회연계협력 구축	-재난대응 골든타임 확보 : 119 광역기동단, 다목적 소방헬기, 소방정 운영,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닥터헬기운영 등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도민인권보호(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시행) -사회적 약자, 여성, 다문화가족 등 따뜻한 복지추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상의 양성평등 강화 등
-핵심공약 13개, 역점과제 9개 총 22개 과제 정책화	-11개 공약 31개 과제	-6개 핵심사업 35개 세부사업	- 6개 추진과제 13개 세부사업	- 11개 공약 34개 과제

III. 충남복지의 환경 및 여건

1. 인구사회적 현황

- 충청남도 행정구역은 15개 시·군, 205개 읍·면·동, 5,445개 통리로 구성되었고, 면적은 8,204㎢임
- 충청남도 2014년 세출예산은 51,492억원이며, 사회복지 14,147억원(27.5%)으로 가장 많음. 충청남도 재정자립도는 25.6%이며 도내 시군평균 21.1(최고-천안 41.2% , 최저-서천 8.7%)임
- 2013년 12월 31일 기준 외국인을 포함한 충남의 인구는 2,097,555명임.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천안시이며, 인구밀도는 천안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계룡시와 아산시이며 반면에 청양군의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12월 31일 기준 충남 연령별 인구는 40세에서 49세 인구가 16.2%로 가장 높으며, 30~39세가 15.0%, 50~59세가 14.9%로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충청남도의 실업률(2013년)은 2.7%로 전국 평균 3.4%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 고용률(2013년)은 60.2%로 한국 평균인 59.4%에 비해 높은 수준임.

□ 2013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로 도평균 36.0%를 보이고 있음.

<표 2> 충남도 인구사회 지표

(단위 : 2013년/%/명)

영역	지표명(산출방법)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기도	평균
인구	유년부양비 (0-14세 인구수/15-64세 인구수)×100	22.0%	21.1%	22.2%	21.0%	21.9%	21.6%
	노년부양비 (65세 이상 인구수/15-64세 인구 수)×100	23.1%	20.6%	33.2%	24.3%	13.2%	22.9%
	등록장애인비중 (등록장애인수/행정구역인구수)×100	6.20%	6.0%	7.6%	7.0%	-	6.7%
고용	고용률 (취업자/만15세이상인구)×100	60.2%	59.8%	61.7%	54.7%	60.0%	59.3%
	여성고용률 (여성취업자/만15세이상여성인구)×100	46.9%	49.7%	52.1%	45.4%	47.65%	48.4%
	노인고용률 (노인취업자/만65세이상인구)×100	41.6%	33.9%	47.2%	44.4%	24.68%	38.4%
	실업률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2.7%	2.1%	2.1%	2.0%	3.0%	2.4%
	청년실업률 (15-29세 실업자/15-29세 경제활동인구)×100	8.3%	39.7%	7.2%	6.4%	7.9%	13.9%
재정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규모]×100	36.0%	34.2%	21.7%	19.1%	71.6%	36.5%
	복지보전예산 비중 (사회복지 및 보전예산/전체 예산)×100	26.0%	34.8%	-	33.2%	26.5%	30.1%
사회	등록외국인비율 (등록외국인수/행정구역인구수)×100	2.4%	1.6%	1.29%	1.2%	-	1.6%
	조이혼율 (이혼건수/행정구역인구수)×100	5.0	2.4	2.2	2.2	2.3	2.82
	자살률 (자살건수/행정구역인구수)×100,000	37.2	35.0	30.8	-	-	34.3
	조출생률 (출생아수/행정구역인구수)×1,000	9.2	8.7	8.1	7.8	9.97	8.75
소득	1인당복지예산 (복지예산(천원)/행정구역인구수)	568	685	-	788	72	708.3
	1인당자체복지예산 (자체복지예산(천원)/행정구역인구수)	40	108	-	170	2	80.0
	기초보장수급자 비율 (기초보장수급자/행정구역인구수)×100	2.6%	3.0%	4.2%	4.38%	1.5%	3.14%
주거	취약계층1인당주거복지예산 (주거복지예산(천원)/(수급자인구+차상위계층인구))	302	229	-	-	-	265.5
	주택보급률 (주택수/일잔가구수×100)	108.8%	108.8%	111.3%	111.5%	-	110.1%

영역	지표명(산출방법)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기도	평균
일자리 (고용)	노인일자리사업참여비 (참여자중취업인원수/취성패참여자수)×100	35.2%	6.2%	5.9%	-	3.3%	12.7%
	사회적기업 고용률 (노인돌봄관련서비스이용자/노인인구)×100	4.7%	-	-	-	0.11%	2.4%
	자활성공률 (장애인돌봄관련서비스이용자/등록장애인)×100	1.5%	29.1%	14.4%	-	26.2%	10.4%
	취업성공패키지성공률 (영유아돌봄관련서비스이용자/영유아인구)×100	58.3%	60.6%	-	-	22.9%	47.3%

출처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기도) 2014

2. 사회복지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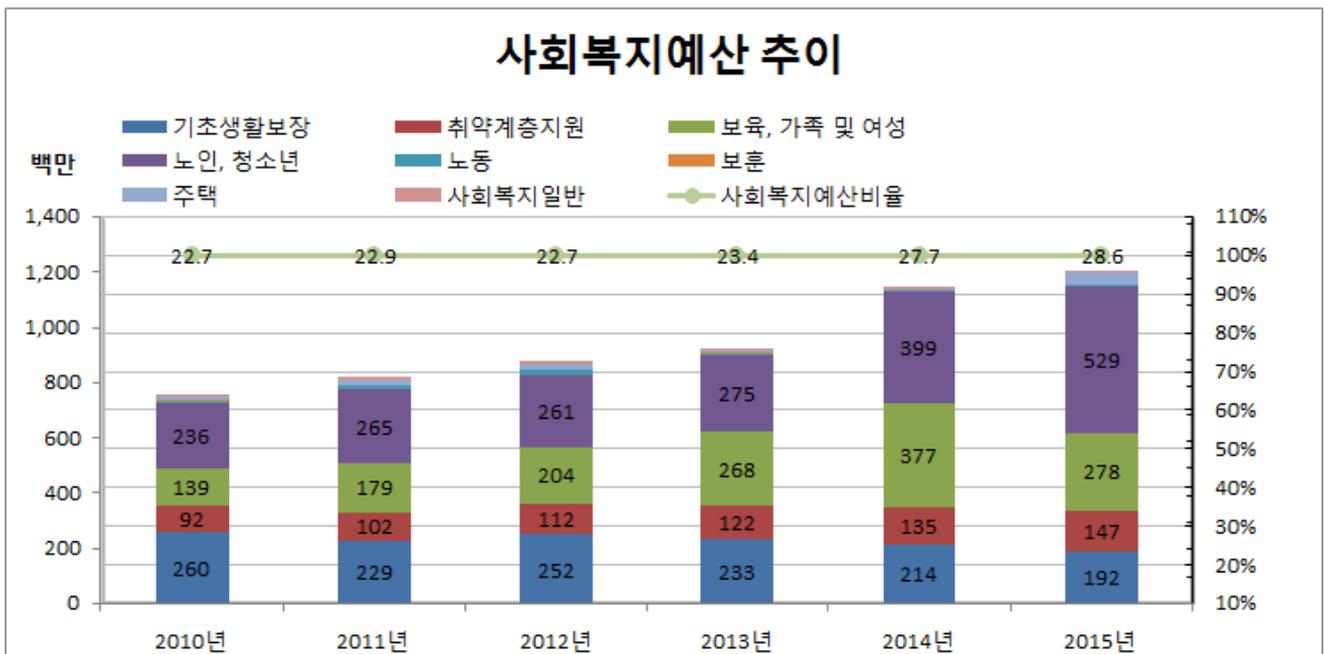
1) 사회복지예산 현황

□ 충남도 2015년 일반회계(4,217,000,000천원)에서 사회복지예산(1,205,333,017천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8.58%이며, 보건예산(83,404,740천원) 비중은 전체 일반회계에서 1.98%를 차지함. 따라서 사회복지 및 보건예산을 포함하면 일반회계 대비 30.56%임.

○ 이러한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추이를 보면 2010년 22.7%, 2011년 22.9%, 2012년 22.7%, 2013년 23.4%에서 2014년 27.7% 그리고 2015년 현재 28.6%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그림 7> 복지분야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출처 : 충청남도 홈페이지(재정정보, 각년도)

<표 8> 복지분야 연도별 예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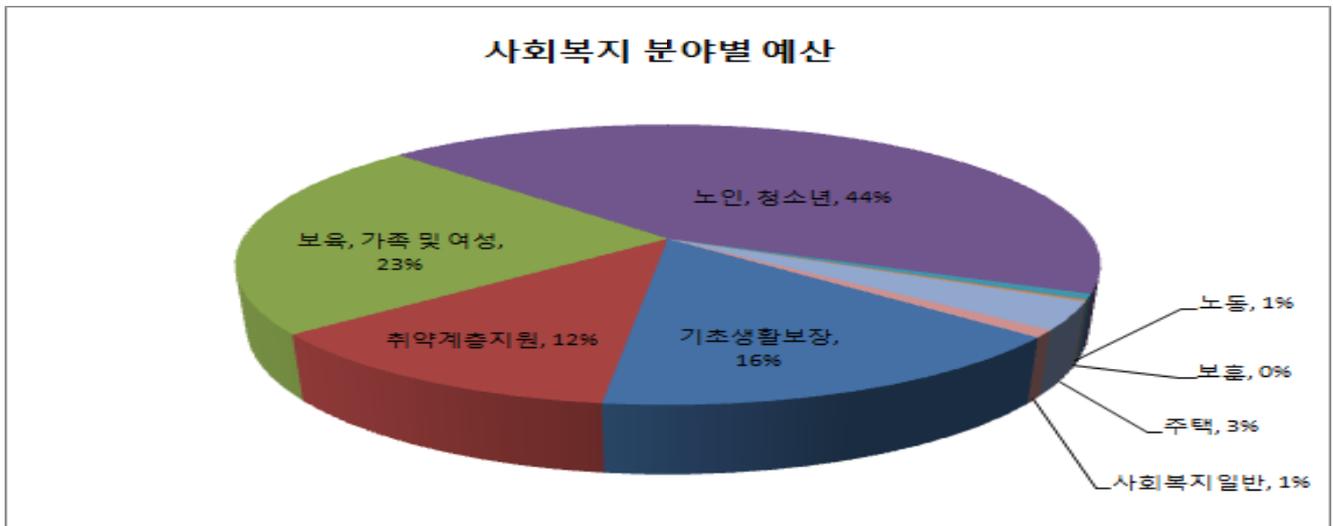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초생활보장	260,239,157	228,719,237	251,621,362	232,602,892	213,779,046	191,740,752
취약계층지원	92,342,801	102,143,635	112,372,431	122,030,641	134,967,703	147,164,587
보육, 가족 및 여성	139,032,913	178,708,268	203,502,667	268,069,427	377,455,833	278,244,942
노인, 청소년	235,950,862	264,684,205	260,652,231	274,608,092	398,612,727	528,913,329
노동	6,853,300	14,477,880	20,632,335	9,660,587	9,442,843	7,878,113
보훈	1,290,100	1,229,600	1,083,600	2,618,037	2,018,037	2,258,000
주택	16,515,000	21,133,000	15,984,600	5,011,500	970,000	38,851,597
사회복지일반	7,882,085	9,472,830	11,527,818	11,416,406	10,314,412	10,281,697
합계	760,106,218	820,568,655	877,377,044	926,017,582	1,147,560,601	1,205,333,017

출처 : 충청남도 홈페이지(재정정보, 각년도)

□ 한편 사회복지분야별 예산현황(2015년)을 살펴보면 노인, 청소년분야 44%, 보육, 가족 및 여성분야 23%, 기초생활보장 16%, 취약계층지원 12%, 주택 3% 등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2> 사회복지 분야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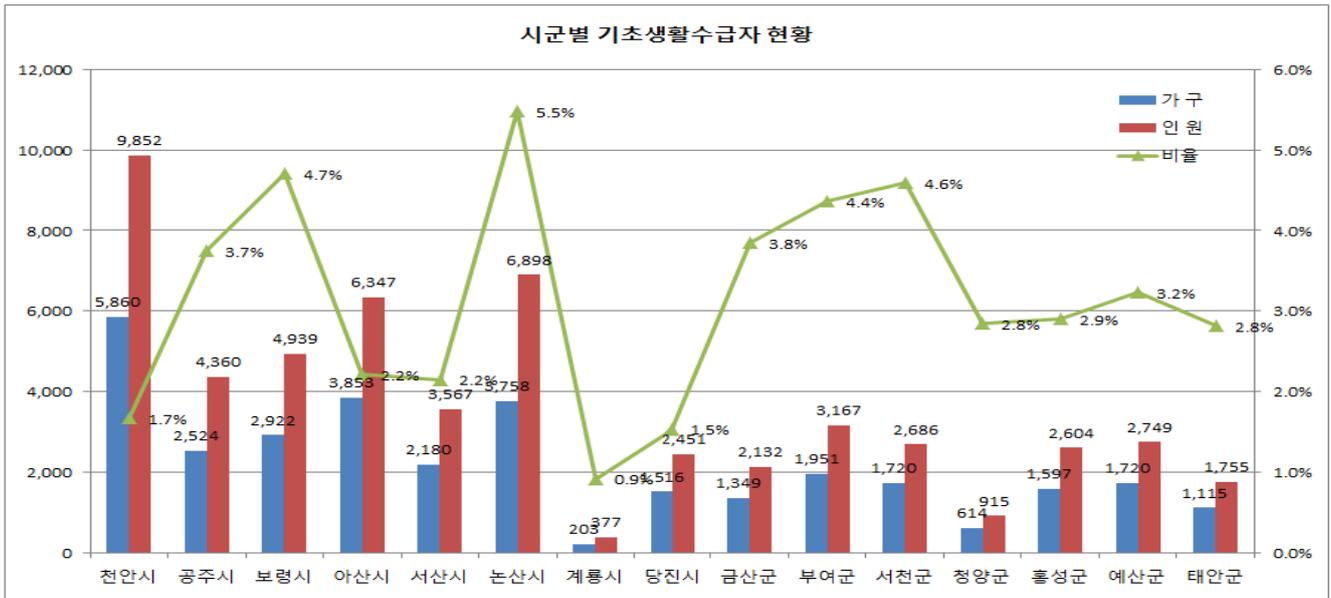
출처 : 충청남도 홈페이지(재정정보, 2015년)

2) 사회복지대상자 현황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2013년 12월 31일 기준 충남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32,882가구, 54,799명으로 조사되었음. 이 가운데 일반수급자는 50,258명, 시설수급자는 4,541명으로 파악됨.

<그림 3> 시군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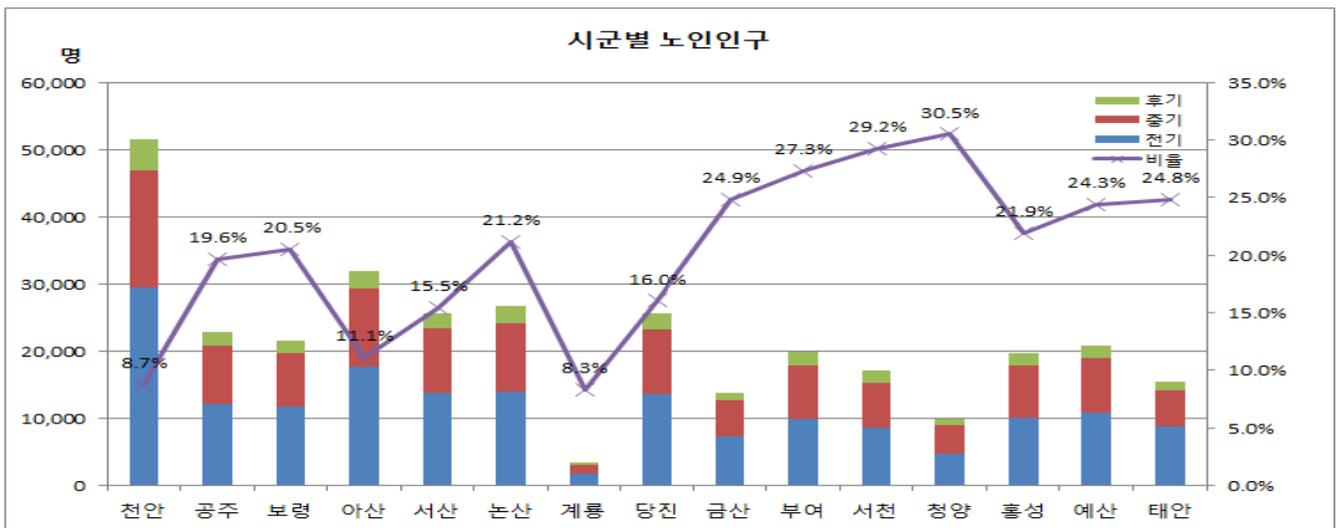


출처: 충청남도. 20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 노인인구 현황

- 충남의 노인인구(2014년 5월 기준)는 325,273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5.9%임.
- 15개 시·군별로 인구대비 고령화비율을 살펴보면, 청양군이 30.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서천군이 29.2%, 부여군이 27.3%로 높으며, 계룡시가 8.3%로 가장 낮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기고령인구인 65~74세가 174,017명, 중기고령인구인 75~84세가 121,833명, 후기고령인구인 85세이상 인구가 29,423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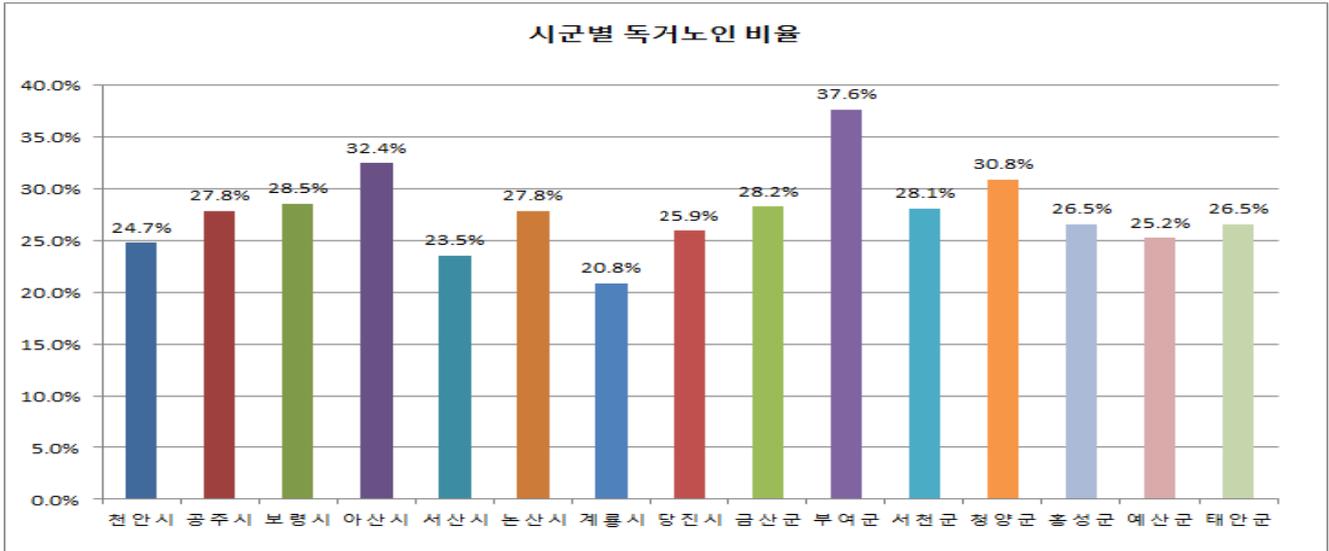
<그림 4> 시·군별 노인인구



출처: 충청남도. 20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 한편 독거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6월말 기준 충남도내 독거노인은 총 90,043명으로 기초생활수급노인이 13,179명, 일반노인이 76,864명으로 조사됨.

<그림 5> 시·군별 독거노인 비율



(3) 장애인 인구 현황

- 충남의 장애인 등록 현황은 124,545명으로 4.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2013년).
- 장애범주를 1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체장애인 66,465명으로 가장 많으며, 청각 13,527명, 시각 12,114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장애등급별로 살펴보면, 6급이 30,729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5급(26,344명), 3급(22,089명)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장애정도가 높은 1급은 9,468명, 2급은 17,162명으로 파악됨.

(4) 보건의료 및 기타 대상자

- 2014년 3월 31일 기준 충청도내 재가정신질환자는 총 7,046명이 등록된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충남 치매환자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 총 15,052명이고 지역별로는 당진이 2,583명으로 가장 많고, 계룡이 175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의 자살률은 2012년 기준 십만명당 37.2명으로 전국 평균인 28.1명보다 높으며, 지역별로는 청양군이 십만명당 68.8명으로 가장 높고, 계룡시가 7.1명으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 2014년 1월 1일 기준 충청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총 31,775명, 결혼이민자는 7,905명임. 외국인 근로자는 남자가 24,970으로 여자보다 많으며, 결혼 이민자는 여자가 7,296명으로 많음.

3) 사회복지공급기관 현황

(1) 사회복지 인력현황

- 충남의 전체 공무원 현황(2013년 12월 기준)은 16,39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사회복지인력은 1,394명으로 전체 대비 8.5%로 나타남.
- 충남 본청의 공무원과 사회복지 인력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공무원은 3,879명, 사회복지인력은 71명으로 전체 공무원 대비 1.8% 임.

<표 4> 사회복지 인력현황

구분	전체공무원 현황	사회복지인력 현황			비율
		총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기타	
계(전체)/명	16,398	1,394	801	593	8.5%
본청/명	3,879	71	14	57	1.8%

출처: 충청남도. 20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 사회복지민간자원현황

- 2014년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충청남도에 17개소가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아산시에 5개소가 있어서 가장 많고, 인구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천안은 2개소에 불과함
-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경우 천안이 6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논산과 아산 순으로 나타남

<표 4>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충남 시군별	계		아동복지 시설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복지 시설		여성복지 시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부랑인 시설		기타	
	시설 수	생활인 원	시설 수	생활인 원	시설 수	생활인 원	시설 수	생활인 원	시설 수	생활인 원	시설 수	생활인 원	시설 수	생활인 원	시설 수	생활인 원
계	343	10,389	14	655	266	6,274	27	1,576	10	196	10	1,460	1	30	16	204
천안시	68	1,744	3	177	45	1,040	5	168	4	47	2	207	1	30	8	75
공주시	31	1,139	0	0	23	564	5	395	2	28	1	152	0	0	0	0
보령시	15	697	2	92	10	273	3	332	0	0	0	0	0	0	0	0
아산시	37	882	1	27	29	539	2	108	1	28	1	118	0	0	3	62
서산시	17	643	0	0	15	457	2	186	0	0	0	0	0	0	0	0
논산시	41	1,507	3	154	30	520	3	145	1	9	3	655	0	0	1	24
계룡시	9	219	0	0	7	168	0	0	1	44	0	0	0	0	1	7
당진시	19	640	0	0	18	611	1	29	0	0	0	0	0	0	1	6
금산군	22	424	2	71	19	316	1	37	0	0	0	0	0	0	0	0
부여군	10	583	1	72	8	391	0	0	0	0	1	120	0	0	0	0
서천군	14	503	0	0	11	369	2	94	1	40	0	0	0	0	0	0
청양군	7	181	0	0	7	181	0	0	0	0	0	0	0	0	0	0
홍성군	17	452	1	26	12	207	1	25	0	0	1	164	0	0	2	30
예산군	20	439	1	36	17	331	1	28	0	0	1	44	0	0	0	0
태안군	16	336	0	0	15	307	1	29	0	0	0	0	0	0	0	0

출처: 2012년 충청남도 기본통계

- 한편 충남의 어린이집은 총 2,061개소이며, 가정어린이집이 1,127개소(54.7%)로 가장 많고, 민간어린이집 648개소(31.4%),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26개소(6.1%), 국공립어린이집 67개

소(3.3%), 직장어린이집 29개소(1.4%) 등으로 나타남(2014년 5월 30일 기준)

- 충남의 특수어린이집은 7종으로 총 381개소가 있으며, 시간연장어린이집이 271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 영아전담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순으로 나타났으며, 24시간어린이집이 2개소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4) 사회복지욕구 현황

- 「2014년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욕구조사」 결과 충청남도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로는 첫째,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가 41.2%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여성과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가 각각 14.7%임.
- 「2013년 충청남도 보건복지 중장기 계획수립연구」에서 충남 도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한 결과 복지보건 인프라영역에서는 ‘각 기관의 사업계획 및 서비스 공유와 정보교환’에 대한 욕구, 또한 ‘도청, 시군청과 규칙적 민관 연계 모임’에 대한 욕구가 강하였음. 또한 노인층은 ‘의료보험 자기부담금 경감’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 대한 홍보’욕구가 많았고, 여가를 위해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의 보급을 약 70% 이상 요구하고 있음.
- 보육·아동·청소년분야는 ‘보육비지원’, ‘국·공립어린이집확대’가 모두 높았고, 청소년들은 ‘방과후 활동지원’, ‘교육비지원’ 등의 욕구가 가장 높았음.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고용문제’ 해결의 욕구, 여성과 가족부분에서는 ‘가족갈등예방’ 및 ‘가족관계 개선’의 욕구가 많았음.
- 충청남도의 복지 전망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민간복지와의 연계협력 강화’, ‘자립강조’, ‘자녀양육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강화’, ‘보육서비스의 품질강화’, ‘학업스트레스 및 학교적응 강화’, ‘장애인권 및 자립강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욕구 확대와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등이 강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빈곤층 증가와 중산층 감소로 인한 소득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빈곤탈출과 생활보장’, ‘출산과 양육지원강화’, ‘건강한 삶 보장’, ‘노후생활 안정’,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을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정부정책변화에 대응하는 충청남도의 사각지대 해소, 출산·양육지원정책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복지환경 및 여건에 대한 SWOT분석

- 충청남도는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젊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시에 장애인·독거노인·학업 중단 청소년 등 취약계층도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인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특히 강점으로는 높은 1인당 총생산량과 낮은 실업률과 높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낮은 범죄률과 높은 교육수준과 적은 교육비, 충청남도 도민으로서의 자부심도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민선 5기에서 6기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복지정책이 장점임
-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연령의 인구비율, 높은 노인인구비율, 낮은 가구소득, 만혼 현상과 첫째아 출산 연령의 상승,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높은 이혼율과 이혼가정의 자녀들, 높은 학교 폭력 발생율, 높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비율과 높은 등록장애인, 높은 자살률, 낮은 행복지수는 약점이 되고 있음.
- 특히 낮은 재정자립도는 충청남도 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인구의 증가도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또한 15개 시군의 사회경제적 불균형과 연계협력체계의 미비, 민-관 협력에 대한 도민의 의지가 높지만 정작 민-관협력의 경험이 부족하고 관-관 협력의 경험도 부족하다는 점은 통합적인 복지정책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다소 위협적 요소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요소는 도민들의 욕구가 민-관협력, 관-관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복지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 이러한 욕구와 인식의 변화로 새로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현한다면 새로운 복지일 자리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롭게 자리잡은 내포신도시의 도청사를 중심으로 복지행정 체계를 재편할 수 있을 것임.
- 무엇보다도 민선 5기에 이어 6기 도지사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사람중심의 정책의지 그리고 친복지적 성향의 충청남도 교육감과의 관-관협력의 환경이 기회요소임.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1인당 총생산량(GRDP) ◦높은 인구 증가율, 높은 유년인구비율 ◦낮은 실업률과 높은 고용률 ◦낮은 비정규직 비율과 높은 정규직 비율 ◦높은 직업교육경험률 ◦낮은 범죄율 ◦높은 교육수준과 적은 교육비 ◦충남도민으로서의 높은 자부심 ◦민선 5기에서 6기로 이어지는 복지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 생산연령인구 비율 ◦높은 노인인구비율 ◦낮은 가구소득 ◦만혼 현상과 첫째아 출산 연령 상승 ◦외국인근로자수의 증가 ◦높은 이혼율과 이혼가정의 자녀들 ◦높은 학교폭력 발생율 ◦높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높은 등록장애인 ◦낮은 행복지수 ◦높은 자살율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협력, 관-관협력에 대한 필요성 공감 ◦사회복지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 공감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 ◦내포 신도시에서의 새로운 행정환경 ◦도지사의 사회복지에 대한 지속적 관심 및 정책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 재정자립도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인구 증가 ◦미약한 청소년복지정책 ◦시군의 불균형과 연계협력체계 구축의 어려움. ◦민-관, 관-관 협력의 경험이 다소 부족함.



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 도민이 도민을 돕는 도민 공동체 의식 향상 ◦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지원 등 서비스 역량 강화 ◦ 도의 사회복지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 ◦ 보건 등 타 분야와 연계 협력 증진

<그림 70> 충청남도 복지환경 및 여건에 대한 SWOT분석

IV. 민선5기 및 민선 6기 복지정책의 성과와 과제

1. 민선5기/ 민선6기 주요 복지정책

구분	민선5기	민선6기	평가
1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수요에 기반한 생애맞춤형 복지 실시	상
2	통합상담콜센터 설치 운영	행복키움지원단 운영 활성화	중
3		광역치매센터 운영 활성화	상
4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광역자활센터 설치 운영	상
5	충남복지재단 설립운영	충남복지재단 설립 운영	하
6		사회복지종합회관 건립 추진	상
7	충남사회복지공제회 설립운영	사회복지사처우 개선	상
8		복지관리지표(6개분야 13개 영역, 79개 지표)에 대한 대한민국 평균 OECD평균과 비교운영, 복지수준 평가관리	상
9		어르신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	상
10		고령화 친화기업육성, 시니어클럽확대 등 노인일자리 지원	중
11	행복경로당 조성 운영	독거노인공동생활제, 행복경로당 확대 운영	상
12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상
13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회관 건립 정상추진	상
14		어르신 자서전 편찬사업	상
15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 급식예산 우선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상
16	보육교사처우개선과 4대보험료 지원	보육교사 역량개발 지원	상
17	영유아무상보육확대(셋제아 이상무상보육, 만5세아 아동 무상보육)	시군별 24시간 거점어린이집 및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상
18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상
19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 강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상
20	장애아동돌봄서비스 확대실시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상
21	장애인관련 조례제정(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인권조례제정)	내포신도시 내에 보훈·애국공원 정상 건립	상
22	장애인 이동 및 접근권 제고(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충남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중
23	심야시간대 응급약 구입 및 도민편의 제공	응급의료 대응체계 확충	상
24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	보호자없는 행복병실 운영확대	상
25	공공의료서비스 확대(공공의료원 장비 현대화, 영유아무료접종확대 등)	만12세 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상
26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활성화	상
27		도서산간 및 독거노인 중심 등 응급의료 취약지구 해소	상
28	출산지원시책확대(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활성화	중
29		국공립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중
30	여성일자리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확대(경력단절방지)	중
31		가족친화적 기업유치	중
32		여성폭력없는 여성이 안전한 충남만들기	중
33	여성, 노인취업자를 위한 평생학습지원	민주적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중
34	다문화 가정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정착단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

2. 민선5기 복지정책의 성과

1) 셋째아 무상보육 시행(전국최초)

- 2011년 도정을 빛낸 10대 시책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무총리 기관상 수상
- 도민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련 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출산율이 전국 최상위 수준임(2012년 현재 합계출산율 충남도 1.57명, 전국평균 1.29명).

2) 행복경로당 운영

- 어르신에게 생활밀착형 고품질 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행복경로당을 조성·운영하고 있음(2014년 현재 175개소 설치 운영).
- 행복경로당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89%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설치 지원(복지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

- 민관 거버넌스의 핵심추진체인 시군단위에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사무국 인력의 인건비 지원
- 관련분야의 중앙부처 평가에서 우수하게 평가됨

4)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 수립 시행(전국최초)

- 장애인복지발전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통합형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수립함.
- 전국 최초 지방정부의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담당공무원의 기획력이 제고되어 광역단체의 역할모델을 제시한 선도적인 사업임.
- 이에 따라 2012년 16개 시·도중 장애인복지수준이 가장 향상된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제1회 한겨레 지역복지대상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고(2012.11.19)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분야 복지행정상 우수상 수상.

5)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충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제정(2011.3)으로 품목에 상관없이 총 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 의무 강화
- 이에 따라 장애인 우선구매 실적이 2009년 37억원에서 2012년 66억원으로 대폭 증가(전국 2위)

6)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추진

-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자살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도민 공감대 형성(자살예방관련 종합대책 수립)
-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2012년), 표준형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자살 고위험군 조기개입 및 위기관리, 생명사랑 지킴이(2013년 4,203명), 생명사랑 행복마을운영(2013년 56개 마을)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중심의 자살예방사업추진 기반 마련
- 이에 따라 인구10만명당 자살사망률이 2009년 45.8명에서 2012년 자살율 37.2명으로 낮아짐.

7)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

-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으로 환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간병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저소득층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부담 해소하고 간병문제의 사회적 차원의 접근 및 해결방안 제시
- 2014년 현재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 안정적 추진(13개 병원, 27병실, 151병상 확대)

8) 지방의료원 현대화 및 기능보강 사업 및 보건의료서비스 공공성 제고

-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및 이용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시설현대화와 의료원 이전신축 및 의료장비를 보강함(지방의료원 이용자 점증적 증가).
- 보건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경영개선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노력

9) 복지보건국 조직 개편

-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대책과, 장애인복지의 주무부서인 장애인복지과 신설
- 이에 따라 관련 부서의 정책 기획력이 제고되었으며 도민의 복지욕구와 복지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체계 마련

10)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노력

- 2013년 이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공무원 보수 95% 이상)
- 2018년까지 공무원 보수 정부기준 100% 준수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2013. 7. 30)
- 처우개선비 지급 : 2006년 이후 전 사회복지시설 지급(근무경력과 시설에 따라 월 9-18만원 차등 지급)

11) 충남형 복지기준 설정 및 단계적 실천

- 도의 복지수준 9개 광역도 중 1위 수준 달성 목표로 열위지표 특별 관리
- 2013년 복지보건중장기계획수립과 도민 정상회의 실시
- 복지관리지표(6개분야 13개영역, 79개 지표)에 대한 대한민국 평균 OECD평균과 비교운영, 복지수준 평가관리

12)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및 사례관리, 예방교육, 사후서비스 등을 위해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2014년도 충남도 우수시책 선정)

3. 민선5기 복지정책의 과제

1) 복지정책 추진과정에 도의회와의 긴장과 갈등

- 민선 5기 초반에 도의회와의 복지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이해 부족으로 복지정책추진 환경 제약받음

2) 충남복지재단 설립 무산

- 사회복지전달체계상 공공과 민간의 협력모델인 복지재단을 통한 복지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와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 광역지자체의 경우 설립·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추진 중단됨.
- 충남복지공동체 추진을 위한 광역단위 추진체의 설치 및 운영의 합리적 방안 도출

3) 내포신도시내에 사회복지종합회관 미설립

- 사회복지직능단체의 운영공간 및 사회복지사의 교육 및 훈련시설 마련
- 광역단위 민간복지기관을 집적화하여 상호연계 및 협력적 운영공간 확충
- 충남복지재단 및 사회복지협의회(현재 대전소재), 사회공헌센터 등 다양한 민간복지 관련기관의 운영기반 확보
- 내포신도시 거주주민의 종합사회복지센터 공간 활용

4) 복지보건부서의 전문행정인력의 부족과 승진 등 인사상의 인센티브 미약

- 충남도정의 핵심부서로의 정체성 확립과 전략적 인력관리 미흡
- 조직내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구성원의 소진(burn out)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종합평가

- 민선 5기의 충남도의 복지정책의 평가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함.
- 전반기는 내외부적 환경제약 즉, 의회와의 관계와 복지재정의 빈약, 구성원의 복지거버넌스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충남도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함.
- 후반기에는 복지보건중장기계획 수립과 도민정상회의를 통한 복지기준선 설정으로 복지정책의 체계화를 통해 관리지표를 마련함으로써 열위지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촉구되었으며 이의 기반위에 민선6기 충남형 복지정책의 방향이 설정됨

4. 민선 6기 복지정책 방향

1) 비전 및 추진 전략

- 비전 :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행복한 복지 충남” :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행복한 권리
 - 세대, 계층, 남녀, 지역 구분없이 모든 도민의 복지권 보장
- 목적 :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충남”

○ 추진전략 :

- ① 주민주체,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의 복지화
- ② 참여복지의 체계화 및 과학화
- ③ 일자리와 함께하는 복지
- ④ 성평등 및 성주류화 복지

2) 추진방향 : 6대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추진(충남복지기준선 확립)

- ① 사회복지예산 확충 : 광역도 최상위 수준(복지예산의 사각지대 해소/ 복지보건예산의 지속적 확충 2018년 32.3%, 2023년 42.3%)
- ②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평생복지 실시(생애주기별 사각지대 해소)
- ③ 사회복지인프라 지역별 불균형 해소(지리적·공간적 사각지대 해소)
- ④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제도 정비 및 선제적 대응(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⑤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 강화로 24시간 안심서비스(프로그램) 추진(시간의 사각지대 해소)
- ⑥ 지역기반의 사례관리체계 확충을 사회자원의 통합적 관리 및 토탈서비스 실시(지역사회 자원 이용의 사각지대 해소)

<참고문헌>

- 경기도. 20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 이재완. 2014.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복지보건분과 활동사례.
- 이재완. 2012. 충남도 복지정책의 정향과 과제. 충남복지 현재와 미래. 복지보건분과 정책개발토론회 자료집
- 이재완, 박순우. 2013.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지방정부 복지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4집.
- 전라남도. 20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 전라북도. 20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2014. 민선 6기 공약실천계획 내부자료.
-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2014. 복지보건분과 워크숍 자료집.
- 충청남도. 2012. 정책개발회의 자료집(민선5기 공약, 정책과제카드).
- 충청남도. 2013. 도정 역점과제에 대한 시책토론회 자료집.
- 충청남도. 2013.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충남형 복지공동체 만들기. 2013 충남도민정상회의 자료집.
- 충청남도. 2013.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
- 충청남도. 2014. 충남사회지표.
- 충청남도. 2014. 2014-2018 민선 6기 공약실천계획.
- 충청남도. 2014.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 결산 자료집.
- 충청남도. 2014.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 보고 자료집.
- 충청남도. 2014. 민선6기 도정방향 기자회견 자료집.
- 충청남도. 2014.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2014년도 정기회의 자료집.
- 충청남도. 20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 충청남도. 201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충청남도. 2014. 충남도정 민선6기 4개년 계획 2014-2018
- 충청남도. 2015. 제3기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2015년도 정기회의 자료집.
- 충청북도. 20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충남 복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합동토론회

‘15. 충남의 복지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저출산고령화정책과 한 치 흠 과장



'15. 충남의 복지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복 지 보 건 국

■■■■■ 목 차 ■■■■■

I. 여건과 과제	57
II. 예산 규모	58
III. 주요업무 추진계획	59
1. 저출산 대책 추진	59
2. 고령화 대책 추진	61
3. 저소득층 지원 및 탈 빈곤 유도	63
4.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65
5. 보건 의료 서비스강화	67
6. 현안사업 추진	69
7. 충남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복지보건증장기계획 추진	70
IV. 시 · 군 전달사항	71

1. 여건과 과제

〈 업무 여 건 〉

- ◆ 저출산·고령화 현상 가속화 및 복지보건 사업비 증가
 -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애 주기별·유형별 복지 욕구 증대
 - ◆ 정신건강 서비스 필요성 및 해외 유입 감염병 증가 추세
 - ◆ 오·백지 등 의료 취약지 해소 및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필요
- ⇒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복지 수요·기대 증가

추진 과제

- ◆ 지방 차원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적극 발굴·추진
 - ◆ 복지 사각지대 지속 발굴 및 수요자별 복지 서비스 강화
 - ◆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2년차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가동
 - ◆ 지역보건 전달체계 활성화 및 감염성 질환관리체계 구축
 - ◆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방의료원 공공성·수익성 조화 추구
-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복한 충남』 구현

II. 예산규모

- '15. 총괄 : 1,441,644백만원(일반 1,206,994 특별 234,650)
 - 도 전체예산(4,870,991백만원)의 29.59%

< 세출예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B)	2014년(A)	증감(B-A)	증감률(%)	
합계		1,441,644	1,432,536	9,108	0.64	
일반	소계	1,206,994	1,178,836	28,158	2.39	
	복지	저출산고령화정책과	781,891	750,109	31,782	4.24
		사회복지과	240,447	259,103	△18,657	△7.2
		장애인복지과	111,547	102,524	9,022	8.8
	보건	보건정책과	54,271	55,752	△1,480	△2.65
		식품의약과	18,838	11,348	7,491	66.01
	특별	의료급여	234,650	253,700	△19,050	△7.51

※ 타 부서 및 기관의 복지예산 1,478억원 포함시, '14년 대비 10.95% 증
 - 주거급여(건축도시과) 393억원, 누리과정('15.부터 도 교육청→시군 교부) 보육료 1,085억원

- '15 기금운용 : 도 기금 전체예산(357,930백만원)의 10.97%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B)	2014년(A)	증감(B-A)	증감률(%)
합계	39,284	39,800	△516	△1.3
사회복지기금	4,674	4,600	74	1.61
재해구호기금	25,300	25,200	100	0.4
난치병치료지원기금	2,210	2,200	10	0.45
식품진흥기금	7,100	7,800	△700	△8.97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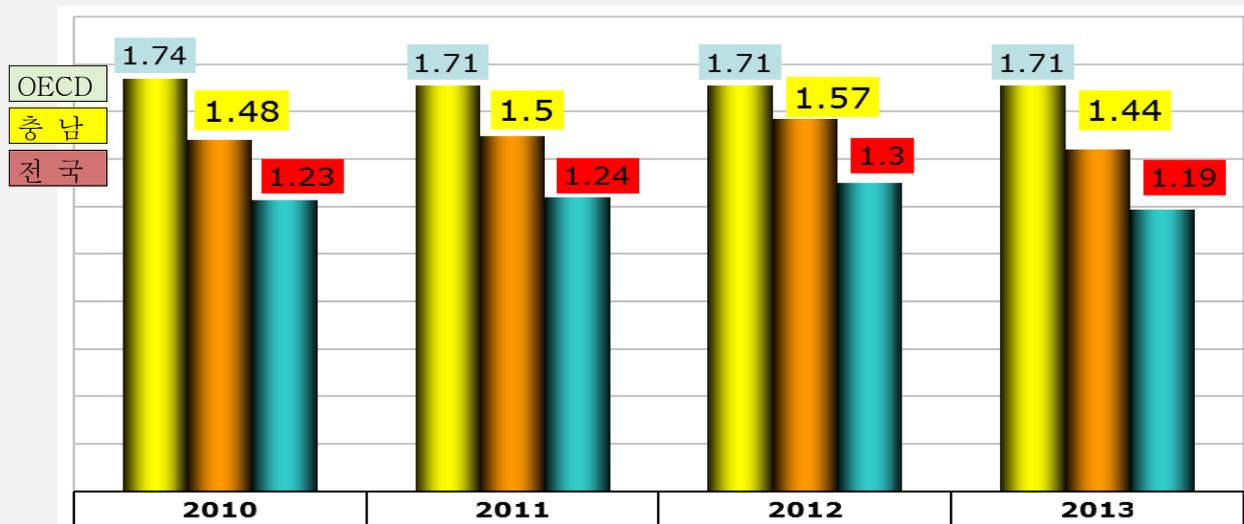
저출산 대책 추진

1-1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관리 강화

< 15개 사업 69억원 / 국 11종 68, 도 4종 1억원 >

◆ OECD 평균 합계출산율 수준(1.70명)을 목표로 출산정책 적극 추진



- 결혼 유도 : 4개 사업 1.3억
 - 미혼 남녀 맞선행사, 출산 홍보, 맞춤형 인구교육 등
- 출산지원 : 5개 사업 29.5억원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청소년·산모 및 고위험 임산부 지원 등
- 신생아 관리 : 6개 사업 38.2억원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모자보건수첩 제공 등
- 출산 장려금 지원(시군 자체사업)
 - ▶ 첫째 - 최대 60만원 ▶ 셋째 - 최대 200만원 ▶ 다섯째 - 최대 1천만원

달성목표 합계 출산율 : '14년 1.44명 → '15년 1.44명

< 36개 사업 3,693억원 / 국 19종 3,331, 도 17종 362억원 >

◆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아동 권리보호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 78,725명 2,633억원

- 어린이집 이용 39,083명 1,952억원, 가정양육 39,642명 681억원

○ 어린이집 지원 : 2,053개소 630억원

- 국공립 등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급간식비, 노후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등

○ 교직원 처우개선 : 11,120명 270억원

-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장애아 보육수당 등 지원

○ 우수 어린이집 확대를 통한 공보육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68개소→71개소), 공공형어린이집(95개소→100개소)

-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 차액보육료 등 4개 사업, 149억원

○ 어린이집 관리감독 및 아동 인권보호 강화

- 지도점검(1천개소) 및 지자체·경찰청 합동 특별 점검 실시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피해아동 쉼터 추가 설치(1개소→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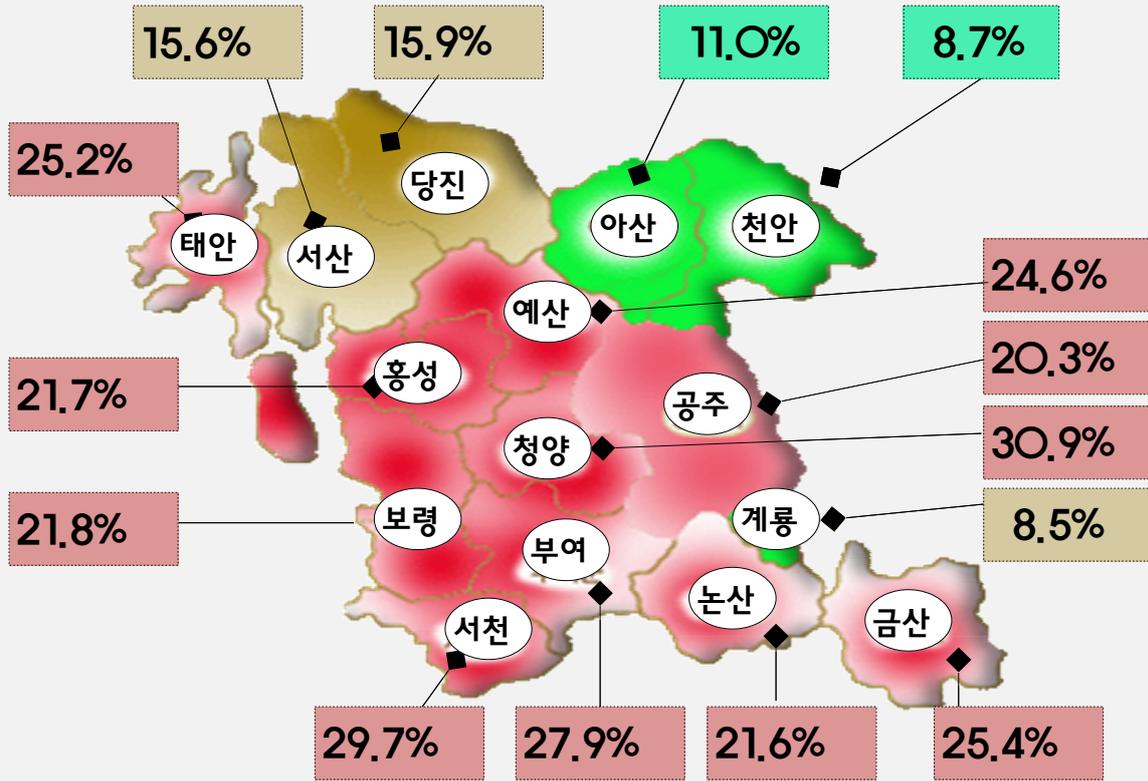
달성목표

우수 어린이집(국공립·공공형) 확대 : '14년 163개소 → '15년 171개소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제고 : '14년 74.2% → '15년 77%

< 67개 사업 6,573억원 / 국 19종 5,826, 도 48종 747억원 >

* 65세 이상 노인 32만8천명 (도 전체 인구 205만명의 15.97%)
 - 독거노인 90천명, 기초생활수급자 13천명, 치매환자 16천명



2-1

기초연금 및 일자리 확대로 소득안정 도모

- 기초연금 지급 : 245천명 5,189억원
 - (기준) 단독 93만원, 부부 148.8만원 이하 → (지원) 단독 2~20만원, 부부 4~32만원
- 일자리 지원 : 14천명 295억원
 - 공공분야 : 14,245명('14년 대비 574명 증), 284억원
 - 민간분야 : 시니어클럽 확충 ('14년 4개소 → '15년 6개소)

달성목표 시니어클럽 확충 : 4개소('14년) → 6개소('15년)

○ 어려운 노인 지원 : 14개 사업 197억원

1)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 단기 가사서비스 : 15천명 124억원

* 안부확인, 식사세면 도움, 목욕보조, 외출동행 등 서비스

2) 독거노인 지원 : 90천명, 9개 사업 90억원

- 응급안전 돌봄 : 1,910가구에 화재, 가스 등 5종 센서 구축·관리

- 무료식당 59개소 운영, 식사배달 2,321명, 이동빨래차 17대 운영

- 공동생활제 확충 : 28개소('14)→ 30개소('15)

○ 재가 및 시설 (요양) 지원 : 12개 사업 423억원

1) 장기요양 급여 지원 : 시설 1,701명, 재가 1,925명, 371억원

2) 시설 기능보강(신축4,증축2, 개보수 등) : 89개소 162억원

3) 치매환자 주간보호소 확대 (6개소→8개소), 치료비 지원(16억) 등

○ 자살 예방관리 강화

- 우울증 선별검사 및 치료비 지원(5,900명), 멘토링 사업(495명)

- 자살 재시도 방지 응급실(9개소) 기반, 사후관리

○ 여가활동 지원 : 15개 사업 211억원

1) 경로당 지원 : 운영비 및 프로그램, 자선전 제작 지원 등 186억원

2) 행복경로당 확충 : 175개소('14) → 180 개소, 24억원

○ 인권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피해노인 쉼터 1개소 운영

달성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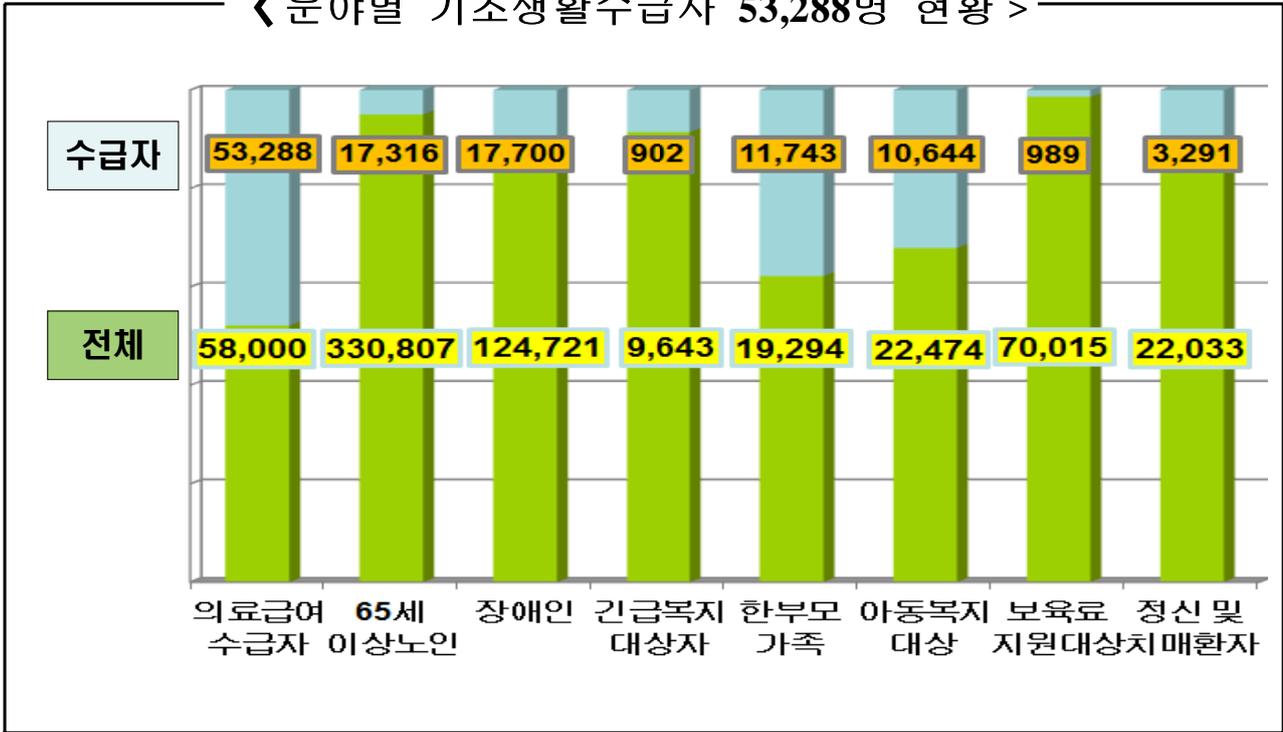
행복경로당 및 공동생활제 확대 : 203개소('14) → 210개소('15)

치매상담센터 등록환자수 : '14년 16,028명 → '15년 16,500명

저소득층 지원 및 탈 빈곤 유도

< 126개 사업 5,315억원 / 국 45종 4,542, 도 81종 773억원 >

< 분야별 기초생활수급자 53,288명 현황 >



3-1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보호

- 기초수급자 탈락·중지자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 발굴(연중)
 - 행복키움지원단(15개) 및 민관협의체(10,463명) 등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자원을 연계, 소외계층 지원
- 생계곤란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 지원(4,377억원)
 - 기초생활수급자(53,288명 1,741억원), 긴급지원(6,000가구 42억원)
 - 저소득층 의료급여(58,000명 2,357억원), 자활·자립 지원(4,800명 237억원)

달성목표 복지사각지대 발굴 : '14년 10,168건 → '15년 11,200건(↑10%)

3-2

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시행

- '15. 7.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개편 시행
 -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탈수급 유인제고 및 보장수준 현실화
 - * (현행) 최저생계비 : 4인 167만원 → (개편) 중위소득 404만원
 - 법안 개정으로 자체 수급자수는 '13년 대비 55% 가량 증가 예상

달성목표 기초수급자 확대·지원 : '14년 55천명→'15년 84천명(↑55%)

3-3

근로능력 수급자 자활(탈수급) 지원

- 15개 자활센터(광역1,지역 14)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 추진
 - 5개 사업 2,747명 152억원 (간병, 집수리, 청소 등)
- 희망키움통장(수급자 및 차상위) 지원 : 898명 227억원
- 희망리본사업 추진(취·창업 상담, 정보제공) : 300명 3.3억원

달성목표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 '14년 2,558명→'15년 2,700명(↑5.5%)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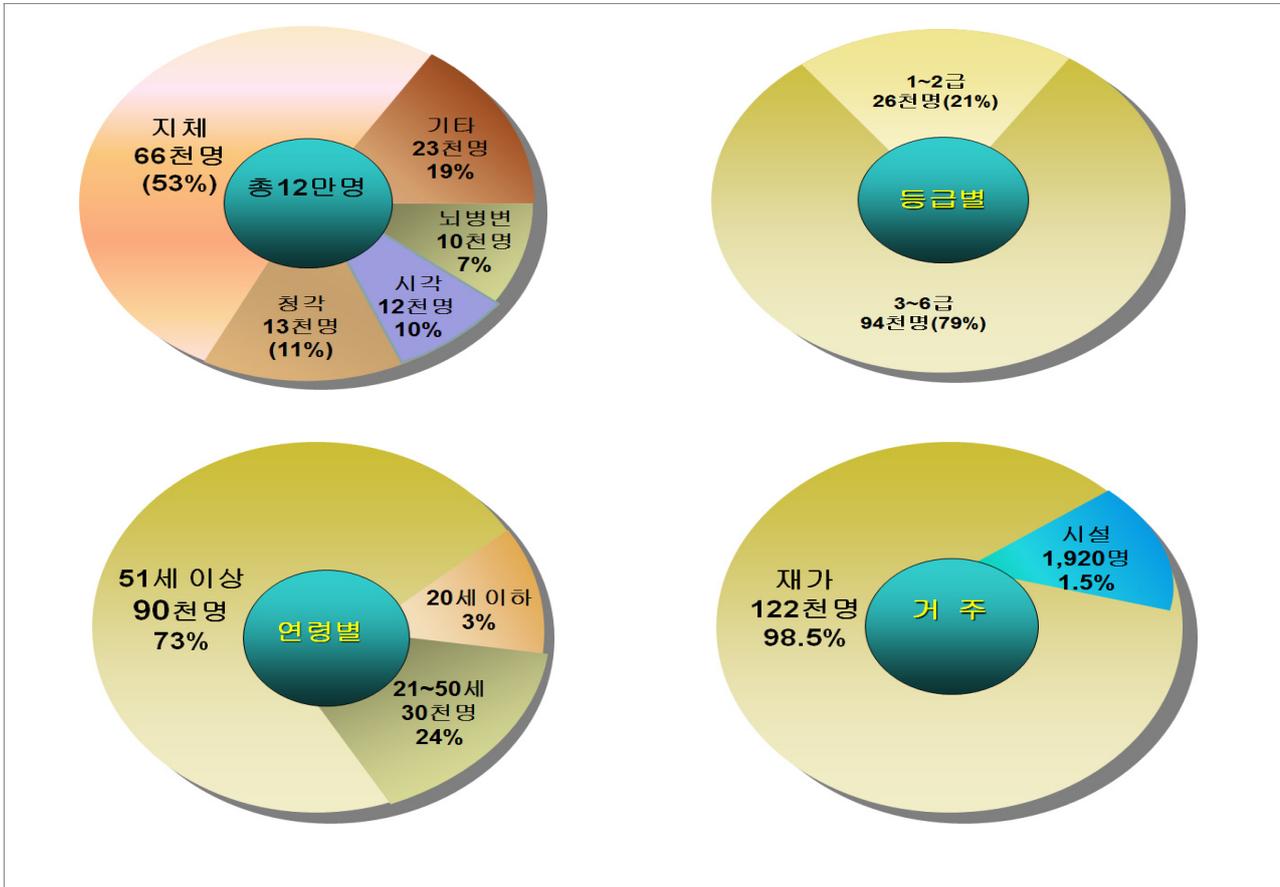
아동복지시설 및 어려운 아동 지원

- 생활시설 운영 지원
 - 양육·자립지원시설(14개소, 12,266백만원), 공동생활가정(21개소, 855백만원)
- 극기체험 프로그램(80명, 22백만원), 해외수련교실 운영(75명, 60백만원)
-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강화
 - 대학입학금(50명, 250백만원), 자립정착금(70명, 350백만원)

달성목표

- ◆ 아동양육시설 임상심리상담원 배치 : 13개 시설(신규)
- ◆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실시 : 50개소(신규)

< 85개 사업 1,553억원 / 국 26종 1,226, 도 59종 327억원 >



4-1

장애인 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

○ 연금 지원 : 19천명 341억원

- 기초 : 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 / 부가 : 연령별·소득별 2~28만원

○ 생활안정 지원

- 장애수당 17천명 76억원, 생활안정지원 29천명 62억원 등

○ 거주시설 지원 : 28개소 388억원

- 거주 및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훈련 등 서비스 제공

달성목표 연금지원을 : 14년(17,782명/69.3%) → 15년(18,156명/70.8%)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대

- '14년 17개소 → '18년까지 21개소 / 4개소 신설 ※ '15년도 1개소 확보
- 공공기관외 민간단체 및 대형매장 등으로 판로 확대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확충

- '14년) 4개소 → '15년) 6개소 ※ '17년부터 전 시·군 운영 목표

달성목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 17개소('14) → 18개소('1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 4개소('14) → 6개소('1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90%) 상위 유지 ※ 전국 평균 66%

○ 장애인 일자리사업 대상인원 확대 및 참여율 제고

- '14년) 766명 → '15년) 820명, 참여율 제고를 위한 인력 pool관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확대채용 목표제 운영

- '14년) 580명 → '15년) 610명 / 연 30명 증

○ 장애인 일자리 체험실습 기회 확대

- 특수학교 3학년 대상, 직업재활시설 연계 체험실습 기회 부여
- 도청 희망카페, 흥성·예산 거주장애인 대상 체험 기회 부여(3명)

달성목표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율 : 96%('14) → 98%('1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확충 : 580명('14) → 610명('15)

< 170개 사업 1,023억원 / 국 103종 884, 도 67종 139억원 >

5-1

감염병 사전예방 및 연중 감시체계 운영

- 법정 감염병(78종) 감시 및 AI,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유입 차단
-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지원 2군 감염병 등 예방강화(13종→14종)
 - ※ '11년 9종→'12년 10종→'13년 11종→'14년 13종→'15년 14종
- 감염병 전문가 보건인력 양성(17명) 및 생물테러 대비훈련(1회)
- 국가지정·거점병원 7개소 운영 및 민·관 신종감염병 합동훈련(10월중)
- 고교 잠복결핵감염검진 및 치료 확대('14년 6,302명 → '15년 7,000명)

달성목표 인공면역력 획득을 위한 예방접종률 향상 : 90.8% → 91.2%

5-2

생명존중 자살예방관리 강화

- 지역사회자원 연계 실무협의회 등 유관기관 협업추진
- 생명사랑 지킴이(4,500명) 운영 및 행복마을(233개소) 육성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재(3종) 및 아동·청소년 명상 프로그램 개발
- 독거노인,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조기개입 및 위기관리
 - 우울증 선별검사 및 치료비 지원(5,900명), 멘토링사업(495명) 추진
 - 자살 재시도 방지 응급실(9개소)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100명)

달성목표 10만명당 연령표준화자살률 : '13년 30.3명 → '15년 30.0명

5-3

응급의료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중증 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및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 향상
 - 소방(119구급)과의 협업 체계 강화 및 닥터헬기 운영 기반구축
 - ※ 닥터헬기 : '14. 12월 공모사업 선정, '15년 계류장 등 6개소 건설
- 의료취약지 응급의료 기반구축 및 심폐소생술 보급 확대
 - 응급의료기관 평가지원 9개소, 취약지역 육성 9개소
 -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5,450명(교육 의무대상 및 라통장 등)
-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인력 법적 충족율 향상 (70%→73%)
 - 법정기준 충족기관(상위 80%) - 지원 확대, 미충족기관(하위 20%) - 보조금 삭감

달성목표

중증외상, 심정지환자의 구급차 이용률 : '14년 45.5% → '15년 46.5%
 응급환자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 : '14년 43.4% → '15년 44.5%

5-4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및 의료기능 강화

-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공공의료기관 정체성 확보
 - 직무 중심 인사관리 및 성과 연봉제 등 보상체계 구축
 -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의료원 친절도 도민평가단 운영(연 4회 평가)
- 시설장비 보강을 통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기반구축
 - (공주) 신축이전(BTL)사업 차질 없는 추진(53,087백만원, '16.10준공)
 - (서산) 주차장 확장공사(330백만원), (홍성) 재활전문병동 신축(9,800백만원)
 - (공통) 의무기록 전산화(EMR) 추진('14. 공주홍성, '15. 천안, '16. 서산)

달성목표

경상수지 개선 : '14.(△48억)대비 20% 개선('15. △38억)
 도민평가 친절도 개선 : '14. 88점 → '15. 90점 목표

① 충남보훈공원 조성

◆ 미래지향적 포용적인 국민 통합 보훈의 추모 공간으로 조성

추진 로드맵

- ① '15.4월까지 실시설계
- ② '15.5월 착공, '16.6월 준공
- '16.현충일 행사 개최 예정



* 총 사업비 70억(국비50%, 도비50%) 중 41억 기확보, '16년 29억 확보 예정

② 충남노인회관 건립

◆ 신축 이전(대전→충남)으로 효율적 업무 추진 및 노인회 활성화

추진 로드맵

- ① '14.12월 , 설계완료
- ② '15.2월 착공, '15.12월 준공
- '16.초 노인회 이전 및 개관



* 사업비 : 4,492백만원(토지 577, 건축 3,600 등)

③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설치확대

◆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수준향상

추진 로드맵

- 기본자료 마련위한 전문가 및 시군의견 수렴 (3.24)
- 보육발전협의회 구성(15여명/4월중) 및 분기별 운영
 - (구성)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군 관계 공무원 등
 - (운영)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충· 운영개선 방안 및 공동체 협력방안 등 마련

목표	2023년까지 충남 복지보건 수준을 전국 도 단위 1~2위로 견인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 현재 충남 복지보건수준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4~'23년까지 추진할 장기 지표개발 및 74개 기준선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 기준, 전국9개 道 1위 보다 20~30% 상향된 수준
추진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이고 실현가능한 6개 분야 46개 중점 추진과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저출산고령화 ▲장애인 ▲보육·아동·청소년 ▲ 여성가족 ▲ 보건의료·식품안전
재정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보건 예산을 매년 10.8%씩 증액, 10년간 ('14~'23) 18조 957억원 투입

□ 2015년 추진계획

- '15. 사업비로 '14년 대비 11.6% 증가한 1조 3,505억원 확보 완료
 - * 계획상 '23년까지 매년 10.8%씩 사업비 증액
- 분야별 사업 적기 추진 및 74개 지표 연계, 하위지표 상향 노력
 - 하위지표 30개(저소득층 3개, 노인5개, 장애인 3개, 영유아청소년 5개 등)

IV. 시·군 전달사항

1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소관

1-1 출산 친화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 OECD 평균합계출산율 수준(1.70) 목표로 출산정책 적극 추진
※ 출산율(명) : '13년 1.57 → '14년 1.44 (전국평균1.19/충남2위)

- 출산·친화 사회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 언론매체(신문 및 라디오)를 통한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홍보
 - 미혼남녀 맞선 프로젝트(4회/240명), 출산장려 교육(50회/3,500여명)
- 다자녀 가정 우대 지원
 - 충남다사랑 카드운영 : 충남도/농협/BC카드사 협약, 시군 가맹업체 모집
 - 3자녀 이상의 다자녀 모범가정 선발 표창패 수여(시군별 1가정씩)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3개사업 32억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청소년·산모 및 고위험 임산부 지원 등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및 산모·신생아 지원 : 4개사업 38억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및 분만 의료 취약지 지원 추진
 - 산후조리원 집단 감염관리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장비 지원

< 협조사항 >

- 미혼남녀 만남 행사 및 인구교육 신청 안내 홍보 협조
 - 시·군청 및 보건소, 읍·면·동, 단체, 학교, 관공서 등 참여 홍보
- 충남다사랑 카드 운영 홍보 및 신규가맹업체 모집 안내
- 취약계층 모자보건사업 대상자 발굴·지원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 국	1.23	1.24	1.30	1.19
서울특별시	1.02	1.01	1.06	0.97
부산광역시	1.05	1.08	1.14	1.05
대구광역시	1.11	1.15	1.22	1.13
인천광역시	1.21	1.23	1.30	1.20
광주광역시	1.22	1.23	1.30	1.17
대전광역시	1.21	1.26	1.31	1.24
울산광역시	1.37	1.39	1.48	1.39
세종특별자치시	-	-	1.59	1.44
경 기 도	1.31	1.31	1.35	1.23
강 원 도	1.31	1.34	1.37	1.25
충청북도	1.40	1.43	1.48	1.37
충청남도	1.48	1.50	1.57	1.44
전라북도	1.37	1.41	1.44	1.32
전라남도	1.54	1.57	1.64	1.52
경상북도	1.38	1.43	1.49	1.38
경상남도	1.41	1.45	1.50	1.37
제주특별자치도	1.46	1.49	1.59	1.43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충남 평균	1.48	1.50	1.57	1.44
천안시	1.39	1.46	1.50	1.35
공주시	1.26	1.25	1.30	1.14
보령시	1.39	1.45	1.37	1.24
아산시	1.73	1.76	1.80	1.64
서산시	1.66	1.67	1.76	1.65
논산시	1.36	1.44	1.43	1.27
계룡시	1.41	1.47	1.45	1.36
당진시	1.49	1.37	1.88	1.89
금산군	1.83	1.62	1.54	1.41
부여군	1.34	1.20	1.38	1.24
서천군	1.37	1.47	1.30	1.30
청양군	1.54	1.55	1.65	1.77
홍성군	1.33	1.28	1.33	1.31
예산군	1.28	1.38	1.37	1.20
태안군	1.31	1.43	1.50	1.41

1-2 안심 보육환경 조성 및 아동학대 예방 추진

◇ 지역 공동체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한 안전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아동학대 예방체계 기반마련

① 지역 공동체 간 소통 활성화로 안전보육 기반 강화

- 1) 부모와 보육인이 함께하는 상생소통 보육프로그램 추진
* 한마음 동요부르기 대회, 역할연기(role playing) 및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 2) 부모 인성교육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교육 및 지원 (12회)
- 3) 「부모 모니터링 단」 운영 활성화 (아동학대 특별점검 및 상시점검 연계)
- 4) 보육발전협의체 구성·운영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방안 마련
* 협의체 구성·운영(도, 시군 및 전문가 등 20여명, 분기 1회 운영)

② 아동학대 예방체계 기반마련

- 1) CCTV 설치지원(미설치 1,042개소) * 정부계획과 연계한 지방비 대응
- 2) 학대 피해아동쉼터(15년)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16년)각 1개소 증설
-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방교육 및 세미나 (69회, 18,630명)

③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교육강화

- 1) 영아반 교사(월3만원) 및 보육교직원(10~15만원) 수당지원
- 2) 교사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지원 (노사민정사무국)
- 3) 교직원 역량강화 보수교육(10,700명), 인성교육(390명)

□ 시·군 협조사항

- 道 기본계획에 의한 세부계획 통보 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

1 - 3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제고

◇ 어린이집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추진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에 대한 적극 참여 협조

□ 사업개요

- 참여시기 : 상시 신청
- 참여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모든 종일제 보육시설
- 인증지표 : 보육환경 및 운영, 보육과정, 건강과 영양, 안전 등
- 평가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 우리도 참여현황

(2014.12월말)

2014년			2015년 목표			비고
보육시설수(A)	인증시설수(B)	인증율(C) (C=B/A)	보육시설수(A)	인증시설수(B)	인증율(C) (C=B/A)	
2,053	1,523	74.2% (도단위 6위)	2,053	1,580	77% (2.8↑) (도단위 5위)	'14년 전국 도단위 평균 73.8%

□ 2015년 추진계획

- 평가인증 교육 및 설명회(12회, 2,400명), 컨설팅(150개소)
- 평가인증시설 인센티브 제공
 - 보육도우미 인건비(월 680천원), 영아반 교사 수당(월 3만원)
 - 교재 교재교구비 지원(시설당 연 80~100만원)
 - 평가인증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월 2~4만원)

□ 시·군 협조사항

- 미참여 보육시설에 대한 원인 분석 및 2015년 참여일정 홍보
 - 보육단체 간담회 등을 통한 참여분위기 확산 노력
- 시·군별 보육특수시책 개발 시 평가인증 여부 감안 지원방안 마련

시·군별 평가인증율('14년말)

(단위 : 개소, %)

구분	'14년말			'13년말			비교 (증감율)
	전체	인증	인증율	전체	인증	인증율	
합계	2,053	1,523	74.2	2,083	1,331	63.9	
천안시	740	561	75.8	753	480	63.7	12.1↑
공주시	85	61	71.8	88	51	58.0	13.8↑
보령시	68	47	69.1	66	40	60.6	8.5↑
아산시	476	309	64.9	488	266	54.5	10.4↑
서산시	155	108	69.7	154	95	61.7	8.0↑
논산시	103	80	77.7	99	74	74.7	3.0↑
계룡시	47	45	95.7	47	40	85.1	10.6↑
당진시	161	136	84.5	170	119	70.0	14.5↑
금산군	35	28	80.0	34	29	85.3	5.3↓
부여군	31	24	77.4	31	23	74.2	3.2↑
서천군	26	20	76.9	28	16	57.1	19.8↑
청양군	16	16	100.0	17	15	88.2	11.8↑
홍성군	52	43	82.7	51	39	76.5	6.2↑
예산군	32	24	75.0	32	27	84.4	9.4↓
태안군	26	21	80.8	25	17	68.0	12.8↑

시·도별 평가인증율('14년말)

(단위 : 개소, 순위, %)

구 분	'14년 인증율					'13년 인증율	증감율
	전체	인증	인증율	전국단위 순	시도단위 순		
전 국 평 균	43,742	32,778	74.9			68.8	6.1↑
시 단 위 평 균	16,704	12,819	76.7			70.7	6.0↑
서울특별시	6,787	5,128	75.6	9	4	71.0	4.6↑
부산광역시	1,957	1,523	77.8	7	3	61.5	16.3↑
대구광역시	1,588	1,249	78.7	5	2	70.8	7.9↑
인천광역시	2,308	2,008	87.0	2	1	80.4	6.6↑
광주광역시	1,260	889	70.6	14	7	67.2	3.4↑
대전광역시	1,698	1,235	72.7	12	5	71.4	1.3↑
울산광역시	946	685	72.4	13	6	67.5	4.9↑
세종특별자치시	160	102	63.8	17	8	61.0	2.8↑
도 단 위 평 균	27,038	19,959	73.8			67.6	6.2↑
경 기 도	13,259	9,706	73.2	11	7	65.6	7.6↑
강 원 도	1,257	988	78.6	6	4	73.6	5.0↑
충 청 북 도	1,229	987	80.3	4	3	72.8	7.5↑
충 청 남 도	2,053	1,523	74.2	10	6	63.9	10.3↑
전 라 북 도	1,654	1,461	88.3	1	1	83.9	4.4↑
전 라 남 도	1,242	826	66.5	15	8	67.4	0.9↓
경 상 북 도	2,212	1,701	76.9	8	5	70.5	6.4↑
경 상 남 도	3,533	2,256	63.9	16	9	62.7	1.2↑
제 주 도	599	511	85.3	3	2	75.8	9.5↑

1 - 4 **어르신 여가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강 및 프로그램 보급 등으로 노후생활의 질 향상 도모
⇒ 여가시설의 확충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화

- 행복경로당 운영 180개소 24.6억원
 - 무료경로식당 운영(180소 11억원), 프로그램 보급(180개소 11억원)
 - 행복경로당 증개축 및 컴퓨터 보급(5개소 2.6억원) ※ 신규조성 : 5개소
- 경로당 기능개선 및 선호 프로그램 보급 258.2억원
 - 기능보강사업(184개소, 32억원), 운영/난방비 지원(5,570개소, 154억원)
 - 증·신축 지원(24개소, 43억원), 소요물품지원(500개소 10억원)
 - 모범경로당 선정 지원(30개소, 0.6억원), 노인지도자 교육(5,570명, 0.6억원)
 - 여가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 및 노인신문 보급(5,570개소, 18억원)

< 협조사항 >

-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시·군비 확보 및 집행 철저
- '15년 행복경로당 신규대상사업(5개소) 적의 선정 및 신속한 추진
- 행복경로당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
 -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27명)와 협력체계 강화
 - 노인복지관 연계, 노인선호 여가 및 건강프로그램 보급
- 행복경로당·독거노인 공동생활제 현장체험 진단
 - 이용 만족도 및 운영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2.23 ~ 3.20 限)
 - 대 상 : 88개시설(행복경로당 60, 독거노인공동생활제 28)
※ 시·군에서는 해당 시설의 프로그램 참여 및 대화 등으로 운영상황 진단

1-5 기초연금 제도 안정적 정착

◇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위해 기초연금 지급

< 추진상황 >

- (지원대상) 만65세이상 노인 중 소득수준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8만원
-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 33만명 중 23.6만명(71%)

< 예산현황 >

- '15년 소요예산 5,410억원 중 5,189억원 확보, 221억원 미확보

구 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비고
'15년 소요액	5,410	4,495	183	732	국비예산 기확보
'15년 본예산	5,189	4,310	184	695	
미 확보액	221	185	+1	37	

< 협조사항 >

- 기초연금에 대한 민원처리기간 준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초연금 부정수급 예방 및 부당수급액 조속히 환수
- 기 신청 탈락자의 수급자격 해당 여부 조사 안내
- '15년 기초연금 시·군비 미확보액 확보(제1회 추경)

1-6 노인 사회활동 참여 강화

◇ 건강하고 활기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의 사회 활동참여 강화

⇒ 노인의 사회관계회복, 긍정심리 상태유지, 소득증가 기여

< 현황 및 문제점 >

-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사회활동 참여는 중요함에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우리 도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낮은 편임

노인자원봉사 참여율(전국16위), 노인일자리 참여율(전국 12위)

* 충청남도 복지보건증장기계획 관리 지표

- 또한, 10만명당 노인 자살율은 전국 2위 수준(96.8명)

⇒ **노인의 사회관계 회복, 긍정심리 상태 유지를 위한 정책 적극 추진**

< 협조사항 >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적극 홍보 및 참여자 발굴
 - 모집인원 14,245명(전국형 3,991명, 지역형 8,966명, 취업창업형 1,288명)
- 시니어클럽 적극 설치('18.까지 1시·군 1개 설치 목표)
 - 설치비(개소당 30백만원) 및 운영비(150~210백만원) 지원
 - ※ 설치시군 : 5개소(193명) 운영(아산, 서산, 부여, 당진, 논산)
- 노인회,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자원봉사 참여홍보
- 어르신 자서전 편찬사업(신규) 적극 홍보

베이비부머 등 예비노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립 추진 중 ('15년말 개소 예정)

1-7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확충

◇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응급상황 긴급 대처를 위해 개인주택 및 공가 등 단독건물을 개보수하여 공동취사·숙박지원
 ⇨ 민선6기 공약사항(연차별 2개소 확대, '18년까지 총36개소 설치 목표)

< 추진상황 >

- '10년 최초 운영, 지난 4년간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
 ※ '10년 11개소 → '11년 11개소 → '12년 22개소 → '13년 25개소 → '14년 28개소
- '14년 13개 시·군 총 28개소 운영(이용인원 170명)

< 추진계획 >

- 올해 2개소(당진, 부여) 확대 설치, 총 30개소 운영 예정
- '15년 예산액 : 177백만원(도 53.1 시군 123.9) ※ 도30%, 시군70%
 - 인프라 구축비 24백만원 + 운영비 153백만원 지원

【지원기준】

인프라 구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년 12,000천원(개소당) / 신규설치 대상지 2개소 ▶ 시설보수, 취사도구 및 침구 구입 등 환경조성비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년 5,100천원(개소당) / 총 30개소(기존28 + 신규2) - 일반운영비 : 월 300천원/ 년 3,600천원 ⇒ 급식, 공공요금·제세, 수리·수선 및 기타비용 - 난방비 : 년 1,500천원(당해 10월~ 익년도 3월) ⇒ 겨울철 난방비

- '15년 추가설치 희망 시·군에 설치·운영비 추경 확보 지원 계획

< 협조사항 >

- '15년 사업대상 시·군(당진시, 부여군) 상반기 내 설치완료
 - 이용대상자 선정, 취사도구 및 생활용품 구비 등 사전준비 철저
- 공동생활제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 활성화 노력

시군	주 소	형 태	이용인원
계	28개소		170
천안(2)	광덕면 대덕1리	경로당	5
	광덕면 보산원리	경로당	5
공주(3)	반포면 온천1리	개인주택	5
	정안면 고성리	경로당	8
	우성면 방흥리	경로당	5
보령(1)	천북면 신덕1리	마을회관	4
아산(1)	인주면 도흥리	경로당	6
서산(3)	해미면 홍천리	개인주택	11
	부석면 창리	부녀회 건물	13
	성연면 해성리	개인주택	16
논산(1)	양촌면 모촌리	마을회관	5
계룡(1)	엄사면 엄사리	경로당	2
당진(1)	합덕읍 내동리	개인주택	15
금산(6)	금산읍 음지리	신 축	4
	금산읍 신대리	경로당	4
	제원면 길곡리	보건진료소(구)	4
	부리면 양곡리	신 축	4
	남일면 신동리	개인주택	5
	진산면 엄정리	개인주택	5
서천(1)	기산면 충절로	마을회관	5
청양(6)	청양읍 군량리	경로당	5
	정산면 대박리	경로당	3
	목면 대평리	경로당	5
	남양면 용두리	경로당	7
	비봉면 장재리	경로당	5
	청양읍 장승리	경로당	3
예산(1)	예산읍 주교2리	경로당	5
태안(1)	이원면 포지리	경로당	6

② 사회복지과 소관

2-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발굴·기획하여 지원
⇒ 유망 사회서비스 지원·확산을 통한 시장형성 및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

- 사업대상 : 42개 사업(도 개발 7, 시군 개발 35)
- 사업비 : 113억원
- 사업기간 : 2015. 2월~ 2016. 1월
- 선정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대상

< 2015년 주요 변경사항 >

- 도 사업 표준화(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등 7개 사업)
- 신규사업 발굴(치매예방통합관리서비스 등 5개 사업)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폐지(자체개발 사업만으로 운영)

< 협조사항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 철저(예산범위 내 사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실적관리
 - 3~11월) 충청도와 지원단 합동 제공기관 현장점검 실시
 - 7~9월) 일자리 창출 실적 중간점검 및 시군간 사업비 재조정
 - 9~11월) 지원단 주최 우수사례공모 및 심사 실시
 - 10~12월) 일자리창출 실적 최종 점검
- ※ 정부합동평가(VPS) 지표로 제공기관별 급여등록시스템에 일자리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제공인력 급여등록 관리 철저

2-2 기부식품사업 활성화 추진

◇ 기부식품의 원활한 모집과 배분의 투명성 확보

⇒ 기부식품 모집액 향상 '14년 81억 → '15년 85억(전국 3위)

-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 조성
 - 도 조례 제정을 통한 푸드뱅크 운영지원 근거 마련
 - 푸드뱅크 개소수 확대(27개소 → 28개소, 1개소 증/ 하반기)
 - 푸드뱅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 ※ 현재 푸드뱅크(마켓) 27개소 중 14개소 전담인력 확보, 운영비 일부 지원
- 기업체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
 -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 워크숍 및 식품기부사업 홍보
 - 우수기부 업체에 대한 「착한기업」 현판제작 지원(60개소)
- 푸드뱅크 운영 투명성강화 및 운영 내실화 위한 현장점검 실시
- 푸드뱅크 운영자 및 관계공무원 합동 간담회(3월)

< 협조사항 >

- 지역내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한 홍보 강화
 - 기부식품 사업에 대한 기업체 인지도 향상을 통해 식품자원 활용도 ↑
- 기초푸드뱅크 전담인력 및 예산 지원 확대
 - 신고사업을 감안 지역 여건에 맞는 예산지원 방안 마련
- 푸드뱅크(마켓) 이용자 관리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등 개인이
용자 우선 지원

2-3 긴급복지지원 활성화

- ◇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절실한 가정에 긴급지원을 통하여 위기상황 해결
- ⇒ 긴급복지 대폭 확대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및 역량강화 필요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사업량 : 6,000가구 ('14년 5,363가구)
- 지원종류 : 9종(생계·주거·의료·교육비 등 지원)
- 사업비 : 42억원(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 제도개편 주요내용 >

-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확대
 - (소득) 최저생계비 '120% ~ 150%이하' → '185% 이하'
 - (금융재산) '300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500 → 700'만원 이하)
- 생계지원 등 지원금액 약 2.3% 인상
- 원스톱 처리 : (당초) 시군 ⇒ (변경) 시군 또는 읍면동 신청 받은 장소 어디서나 종합적 상담 처리
- 초기 신고시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만으로 48시간 내 1개월분 선지원 원칙(1일 현장확인, 1일 지원결정)
- 현장확인 : 서류 간소화하여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만으로 확인대체

< 협조사항 >

- 긴급지원의 필요한 가구 적시 발굴, 생계비 등 적극지원 노력
 - 2015년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 탄력적·적극적 대응
- 소득·재산기준 초과할 경우에도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성 등 개별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적정성 여부 판단
 - 시장·군수 재량,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적극 활용

2-4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시행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14.12.9)에 따라 '15.7.1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로 전면개편 시행
- ⇒ TF구성 및 자체계획 수립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 제도개편 주요내용 >

- 대상자 선정기준 다층화
 - (단일→급여별 기준)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 도입,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급여수준 현실화
 - (급여보장 강화) 급여수준을 중위소득과 연동,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주거급여 지급

* 최근 5개년('08~'13) 평균인상률 : (최저생계비) 4.09%, (중위소득, 가계동향) 4.99%

< 협조사항 >

- 시군 맞춤형복지급여 준비계획 수립(3.16)
 - 일반현황, TF구성 및 역할, 점검회의 운영, 상황관리체계 등
 - 공무원 재배치 등 인프라 준비, 제도시행 추진계획, 담당공무원 교육, 조례정비, 기초생활급여 추가예산 확보 등
- 시군 TF구성 및 결과 보고(3.16)
 - 1팀장, 3~4개반 15명 내외 구성, 3월~상황종료 시까지
 - 준비상황 총괄, 읍면동 실적점검, 주민홍보 및 대상자 발굴 등
-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채용·배치(5월~8월)
 - 채용 완료·배치(5월), 국비 및 시군 예산 확보

2 - 5 아동학대 예방대책 추진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 및 피해아동쉼터 추가 설치 등 예방대책 적극 추진

< 아동학대 추세 및 아동보호전문기관현황 >

- 2011년 이후로 아동학대건수 매년증가하는 추세
 - 2011년(309건) → 2012년(334건) → 2013년(316건) → 2014년(468건)
 - ※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 2011년(3건), 2012년(6건), 2013년(3건), 2014년(4건)

○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기관명	소재지	종사자수	관할구역	운영비	비고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거점)	천안	14	3개소(천안, 아산, 당진)	520백만원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논산	11	6개소(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공주)	340백만원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내포	11	6개소(홍성, 서산, 보령, 태안, 청양, 예산)	340백만원	

< 협조사항 >

-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설치(1개소→2개소)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관련 인프라 구축(서부권 1개소 신설 ※천안(1) 운영 중)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등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위해 교육 및 홍보 강화
-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학교, 병원 등을 통한 학대 위험군 발굴 및 사후 재학대 모니터링
 - 학대의심 사례 발견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 협력·연계체계 마련
- 건강보험·보건소정보시스템·교육청을 통해 관내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실시 아동, 학령기 미취학 아동에 대한 방임 여부 조기 모니터링
- 아동학대피해아동 시설 입소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
-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범죄신고전화 112로 통합('14. 9. 29))

2-6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 제공

< 사업개요 >

- (근 거)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 (사업지역) 시·군 내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 ※ 천안시 미확대
- (사업대상)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
- (인력구성) 전담공무원(3명),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4명) 배치 가능(사례관리 아동 수에 따라 최대 7명까지 채용)
- (사업예산) 45억원(국비 100%), 시·군별 3억원
- (지원내용)
 - 가정방문을 통해 인적조사,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후 사례관리 대상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주기적 재사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 실시

< 협조사항 >

- 전담부서 미설치 및 공무원(3명)미배치 시·군은 전담부서(공무원) 설치·배치
 - 사회복지, 간호·보건, 행정 분야 각 1인씩, 최소 3인(팀장 포함) 배치
※ 전담팀 구성 : 서산, 논산/ 전담공무원 : 서산, 논산만 3인 배치
- 실무경험 3년 이상인 공무원 배치
-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2년 이상 근무를 권장
※ 매년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평가에 반영

참고 1

시·군별 전담팀 및 인력 구성 현황(2015. 1월말 현재)

구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총계	103	10	5	9	6	9	9	6	8	5	6	6	6	7	6	5		
공무원(소계)	37	3	2	3	2	3	3	3	2	2	2	3	2	3	2	2		
전담인력	팀장	겸직	1 (복지)	1 (행정)	1 (행정)	1 (행정)	-	-	1 (행정)	1 (행정)	1 (복지)	1 (복지)	1 (행정)	1 (행정)	1 (보건)	1 (행정)	1 (행정)	
		비겸직	2				1 (간호)	1 (복지)										
	건강	겸직	0															
		비겸직	5		1 (보건)	1 (보건)		1 (간호)	1 (간호)	1 (보건)								
	복지	겸직	5			1 (복지)				1 (복지)		1 (복지)		1 (행정)				1 (행정)
		비겸직	9	1 (복지)		1 (복지)		1 (복지)	1 (복지)	1 (복지)	1 (행정)		1 (복지)		1 (복지)	1 (복지)	1 (복지)	
	보호교	겸직	0															
		비겸직	3	1 (복지)									1 (행정)		1 (행정)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66	7	3	6	4	6	6	3	6	3	4	3	4	4	4	3	
	전담조직 구성		-	-	-		전담팀	전담팀										

※ 기준 : 전담인력 최소 7인(전담공무원 3명, 민간인력 4명)

- 전담조직 구성 : 서산, 논산 / 전담공무원 3명 확보 : 서산, 논산
(겸직공무원만 배치 : 아산, 부여, 청양, 태안)

2-7 아동복지시설 상시 지도·점검체계 구축

◇ 도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시 지도·점검체계 구축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시설현황 >

(2014. 12. 31. 기준)

(단위 : 개소, 명)

생활시설	계	양육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	지역아동센터
시설수	260	13	1	21	225
아동수	5,902	604	19	232	5,047
근무자수	792	227	3	43	519

< 추진계획 >

- 아동복지시설 도·시군 합동 운영실태 지도·점검(3~6월)
 - 법인·시설 회계 및 전반적 운영상황 점검
- 시설내 성범죄 및 학대 예방 등 입소아동 인권강화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 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참여여부 점검

< 협조사항 >

- 아동복지시설 관리 감독 철저(아동학대, 보조금 횡령 등)
 - 지역아동센터 시·군 자체점검을 통한 보조금 집행 감독 철저 (시설장 성추행, 운영비·급식·정서함양 프로그램 등의 보조금 이중집행)
- 도와 연락체계 구축으로 문제점 공유 및 해결
 - 동향 발생시 즉시 보고, 그룹홈 및 지역아동센터 개·폐소시 수시 보고

2-8 제93회 어린이 주간행사 추진

◇ 어린이에 대한 부모와 이웃의 사랑과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어린이 주간(5.1~5.7) 동안 다채로운 행사 추진

< 행사개요 >

- 근거 : 아동복지법 제6조 및 행복출발 아동프로젝트 5개년 계획
- 제93회 어린이날 기념식 및 축하행사 : 道 및 시·군별로 추진
- 어린이 주간(5.1~5.7) : 8개 아동단체와 연계 추진
-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선정 표창(중앙, 도)

< 추진계획 >

- 도 「제93회 어린이날 기념식 및 충남어린이 큰잔치」 행사
 - 때 · 곳 : 2015. 5. 3(일) 어린이날, 보령시 종합운동장
 - 참석인원 : 20천여명(어린이 및 가족)
 - 사업비 : 100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유공자 표창 : 27명(중앙11, 도 16)
- 「어린이 주간」 행사 지원 : 8개 단체 80,000천원
 - 아동복지연합회(시설아동 종합예술제, 꿈나무축구대회) : 41,300천원
 - 색동회(소파 방정환선생 탄신 기념식) : 9,500천원
 - 충남장애인부모회(장애아동·형제아동 봄소풍) : 4,500천원
 - 가정위탁지원센터(푸른 꿈 푸르른 세상) : 3,500천원
 -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 성폭력 예방캠페인/2개소) : 7,000천원
 - 어린이재단충남지역본부(후원자와 아동 만남 행사) : 8,200천원
 - 국내입양기관(입양의 날 행사) : 6,000천원

< 협조사항 >

- 시·군별 자체 실정에 맞는 행사계획 수립·시행
- 도 행사 주관기관(보령시)은 행사에 차질 없도록 준비 철저

3 장애인복지과 소관

3-1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적극 발굴

- ◇ '15.1.1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확대, 그러나 신청률 저조
-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신청률 제고방안 지속추진 필요

- '14.12.31현재, 道 수급률 69.3%수준, 목표 수급률 70.0% 보다 저조
18세이상 중증장애인 25,644명 대비 연금수급자수 17,782명 → 69.3%
※ 장애인연금 신규 발굴 (신청) 실적 현황 ('14.12.31현재)「참고」
- '15.1.1부터 선정기준 확대되었으나 시군별 홍보가 소극적임
- 선정기준 단독 870 → 930천원 / 부부 1,392→1,488천원
- 시군 부서장 및 지휘부 관심도에 따라 신규신청률 증감 영향
- '15.1.31현재 道 평균 신청률 1.9%로 신규 신청률 저조
道 평균이하(서천1.7 예산1.5 청양1.2 서산0.7 태안0.7)
⇒ 읍면동 업무지도 강화 등 교육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현재 주로 신규, 계약직 등이 업무담당, 경력공무원으로 업무지정 배려 필요

< 협조사항 >

- '15.1.1, 만18세 이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
- '14.7.1.이후 소득인정액으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하여 '15.1.1.확대 시행되는 선정기준 포함여부 재확인 확행 (3,519명신청→3,161명 선정)
- 지속적으로 직권신청제도 적극 활용,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 및 부가급여 지원 기능에 대해 적극 안내
- 「201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포함) 주요 개정사항」 홍보 강화
- 시군 부서장 및 지휘부 관심제고, 신청 독려 추진방안 강화

참고 1

2015년 장애인연금 신규 발굴(신청)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기본 현황 (1.31일 기준)				신규수급자 현황 (1.31일 기준)		1. 1 ~ 2. 12 신청현황		비고
	18세이상 중증장애인 (A)	연금수 급자수 (B)	수급률 % B/C*100	신 청 가능자 (C=A-B)	신 규 수급자수 (D)	비 율 % D/C*100	신청자 수 (E)	비율 % E/C*100	
계	25,635	17,835	69.6	7,800	172	2.2	219	2.8	경고
천안시	5,025	2,898	57.7	2,127	46	2.2	60	2.8	√
공주시	2,164	1,615	74.6	549	9	1.6	16	2.9	
보령시	1,737	1,332	76.7	405	6	1.5	12	3.0	
아산시	2,912	1,886	64.8	1,026	25	2.4	25	2.4	√√
서산시	1,868	1,251	67.0	617	8	1.3	8	1.3	√√
논산시	2,481	1,997	80.5	484	12	2.5	18	3.7	
계룡시	248	147	59.3	101	3	3.0	3	3.0	√
당진시	1,730	1,070	61.8	660	22	3.3	20	3.0	√
금산군	878	671	76.4	207	2	1.0	8	3.9	
부여군	1,426	1,150	80.6	276	10	3.6	9	3.3	
서천군	1,084	854	78.8	230	5	2.2	9	3.9	
청양군	542	392	72.3	150	4	2.7	6	4.0	
홍성군	1,307	975	74.6	332	5	1.5	11	3.3	
예산군	1,327	953	71.8	374	11	2.9	8	2.1	√
태안군	906	644	71.1	262	4	1.5	6	2.3	√

※자료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참고 2

1월 정부합동평가 신규수급률(전국)

(단위 : 명 , %)

구 분	2015년 중 신규 수급자 책정자 수 비중(A)		최근 3년간 신규 수급자 책정자 수 비중(B)			(A/B) × 100
	2015년 신규 수급자(①)	(A)=(①×0.5)	2013년 신규수급자 (②)	2014년 신규수급자 (③)	(B)=(②×0.25)+(③×0.25)+ (①×0.25)	
계	2,898	1,449.0	19,645	42,917	16,365.0	8.8
서울	547	273.5	2,905	6,488	2,485.0	11.0
부산	217	108.5	1,729	2,810	1,189.0	9.1
대구	116	58.0	815	2,007	734.5	7.8
인천	163	81.5	1,167	2,297	906.7	8.9
광주	62	31.0	697	1,060	454.7	6.8
대전	81	40.5	471	1,189	435.2	9.3
울산	59	29.5	329	900	322.0	9.1
세종시	10	5.0	47	139	49.0	10.2
경기도	559	279.5	4,361	8,764	3,421.0	8.1
강원도	85	42.5	895	1,517	624.2	6.8
충북	91	45.5	718	1,450	564.7	8.0
충남	162	81.0	961	3,054	1,044.2	7.7
전북	150	75.0	797	2,044	747.7	10.0
전남	175	87.5	934	2,342	862.7	10.1
경북	186	93.0	1,165	2,934	1,071.2	8.6
경남	191	95.5	1,388	3,134	1,178.2	8.1
제주	44	22.0	266	788	274.5	8.0

참고 3

1월 정부합동평가 신규수급률(시군)

(단위 : 명 , %)

구 분	2015년 중 신규 수급자 채정자 수 비중(A)		최근 3년간 신규 수급자 채정자 수 비중(B)			$(A/B) \times 100$
	2015년 신규 수급자(①)	$(A)=(① \times 0.5)$	2013년 신규수급자(②)	2014년 신규수급자(③)	$(B)=(② \times 0.25) + (③ \times 0.25) + (① \times 0.25)$	
계	162	81	961	3,054	1,044.0	7.7
천안시	47	23.5	139	626	203.0	11.5
공주시	11	5.5	69	270	87.5	6.2
보령시	5	2.5	68	161	58.5	4.2
아산시	22	11.0	144	327	123.2	8.9
서산시	8	4.0	75	224	76.7	5.2
논산시	9	4.5	98	228	83.7	5.3
계룡시	3	1.5	10	29	10.5	14.2
당진시	20	10.0	55	229	76.0	13.1
금산군	1	0.5	43	111	38.7	1.2
부여군	8	4.0	51	201	65.0	6.1
서천군	5	2.5	33	120	39.5	6.3
청양군	4	2.0	31	71	26.5	7.5
홍성군	6	3.0	66	140	53.0	5.6
예산군	10	5.0	50	196	64.0	7.8
태안군	3	1.5	29	121	38.2	3.9

3-2 희망나눔 결연사업 추진

- ◇ 성폭력 등 사각지대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 활동
- ◇ 지역사회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동 전개
- ⇒ 보호대상자를 단계별로 확대 추진, 소외계층에 대한 세밀한 사회안전망 구축

- 참여대상 : 관련공무원, 사회복지사, 사회단체, 인권지킴이 등
- 보호대상 : 사각지대 장애인
- 보호방법 : 주2~3회 정기적으로 가정방문
- 사업비 : 15,000천원(위문품 구입비 등)
- 사업내용 : 말벗, 재능, 청소, 빨래 인권보호 활동 등
- 형식적인 사업추진 탈피 사업설명 강화 및 지속독려
- 단계별로 확산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 (1단계), 보호자가 없는 재가장애인 → (2단계), 보호자가 있고 낮 시간 홀로장애인 → (3단계), 기타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등

※ 2014년 말 현재

- 보호대상자 402명(전년도 353명, 49명 ↑)
- 결연참여자 653명(전년도 483명, 170명 ↑/사회단체 인권지킴이 등)

< 협조사항 >

- 신규(보호)대상자 및 참여자 확대 발굴 * 참고표 붙임
 - 지역내 인적·물적자원 활용,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결연사업 추진점검(분기보고) 및 우수활동사례 홍보(시군지, 장애·지역신문 등)
- CCTV 설치 57가구 관리운영(지역 경찰관서 협력)

참고 1

「희망나눔 결연사업」 대상(예상) 현황

(단위 : 명)

구 분	결연 참여자	보호 대상자		등록 장애인	독 거		
		'14년말	대상현황		전체	남	여
계	653	402	2,153	124,721	24,372	12,635	11,737
천안시	41	83	768	23,941	4,326	2,456	1,870
공주시	170	21	92	8,795	1,501	821	680
보령시	89	38	109	8,490	1,633	820	813
아산시	33	35	220	14,082	2,317	1,304	1,013
서산시	26	35	57	9,092	1,182	546	636
논산시	77	49	107	10,569	1,616	802	814
계룡시	5	2	2	1,458	209	83	126
당진시	23	16	158	9,475	1,961	1,093	868
금산군	32	19	93	4,551	1,502	719	783
부여군	35	34	103	7,146	1,586	705	881
서천군	9	9	267	5,815	2,551	1,417	1,134
청양군	59	22	16	3,005	620	264	356
홍성군	17	11	74	6,609	1,343	679	664
예산군	29	20	57	6,874	1,182	546	636
태안군	8	8	29	4,819	843	380	463

3 -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서비스와 취업기회 제공

- 17개소(보호자업장 16, 근로작업장1)
- 시군별 현황 : 천안3, 공주2, 보령2, 아산2, 서산3, 당진1
금산1, 서천1, 청양1, 태안1 ※未설치 시·군 : 예산, 홍성, 논산, 계룡, 부여

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대 : 17개소 → '18년까지 21개소

- ◎ 직업재활 시설이 없는 시·군 5개 지역 우선 설립 추진
 - 현재 계룡, 부여, 홍성 예산군에서 신규 설립 검토 중
- ◎ 직업재활이 있는 시·군은
 - 경영마인드와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계획 등 비전을 제시한 시설 중심으로 엄선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 ※ 세부현황 : 붙임 참조

- ◎ 확 정 : 6개 시설, 7개 사업(신축 1, 개보수 1, 장비보강 5)
- ◎ 이 후 : 기능보강 대상시설 추가 선정
 - 시군비 부담, 생산품 판로를 위한 자구노력, 사업의 시급성 등 고려

< 협조사항 >

- '1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신청 준비 : 6월까지
 - 부지확보(토지대장 등 첨부), 건축가능, 민원발생, 근로 장애인 접근성, 사업업종 및 고용효과 등 신청 자료준비와 당위성 부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복지향상 추진
 - 임금수준 향상, 기능보강 신청 시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포함 추진 등

참고 1

2015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확정내역

시군	시 설 명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5개 시군 6개 시설 7개 사업		1,418	566	283	283	284
천안	가칭)천안시 동남장애인 보호작업장	보호작업장신축 (신축)	518㎡	942	328	165	165	284
공주	두레일터	납품용차량구입 (장비보강)	1대	77	39	19	19	
보령	보령시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석면텍스 철거(개보수)	1,232㎡	73	37	18	18	
		납품 및 출퇴근용 차량구입(장비보강)	2대	55	27	14	14	
아산	성모 신나는일터	마스크팩 충전기계 구입(장비보강)	1대	128	64	32	32	
	꿈꾸는나무	제빵기계 및 테이블구입(장비보강)	1대(기계) 6개 (테이블)	14	7	3	3	
서산	서림 직업재활원	편직기계 교체 및 부로아 휠 설치(장비보강)	10대(기계) 1식(휠)	129	64	32	32	

3 - 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대 추진

- ◇ 장애인편의 시설 확대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
- ◇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설치 확대로 적정설치율 제고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구 분	대상 기관	설치대상 항목수(A)	설치항목 수(B)	적정설치 항목수(C)	설치율 (D=B/A)	적정설치율 (E=C/A)	비 고
전 체	7,379	358,187	232,457	196,565	64.9%	54.9%	2013년 전수조사
공공기관	598	40,182	32,359	27,328	80.5%	68.0%	2014년 자체실태 조사
시군청사	19	1,678	1,473	1,282	87.8%	76.4%	

□ 추진계획

1) 2015년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업추진

- 설치대상 : 시군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등 (*시군청사 우선정비)
- 추진일정 : 추진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2~3월)
사업추진완료(8월), 설치실태조사(9월)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 제정 권고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적정유무 점검을 위한 법정기준 마련
 - 점검대상, 점검시기, 점검방법, 결과보고 및 조치요령 등 규정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문가의 점검 참여로 설치율 제고
 - * 조례제정 (6개시) : 천안, 보령, 아산, 서산, 계룡, 당진

< 협조사항 >

- 시군청사의 편의시설 정비로 적정 설치율 제고를 위해 적극 추진
 -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운영(9개 시군)
 - 건축 허가 승인 협의시 편의시설 설치 법적기준 충족 점검 강화
 - 조건부 승인 협의 지양, 설치 현장 점검시 부적정 설치 시정조치 시행
- ⇒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 방지 및 편의증진 도모

<2013년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구 분	조사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A)	설치항목수 (B)	적정설치 항목수(C)	설치율 (%) (D=B/A)	적정설치율 (%) (E=C/A)
계	7,379	358,187	232,457	196,565	64.9%	54.9%
천안시	1,326	60,416	41,109	37,145	68.0%	61.5%
공주시	428	21,537	14,941	12,864	69.4%	59.7%
보령시	423	21,907	14,496	11,230	66.2%	51.3%
아산시	1,028	47,382	29,634	24,298	62.5%	51.3%
서산시	750	32,375	20,619	18,427	63.7%	56.9%
논산시	592	27,159	16,207	13,675	59.7%	50.4%
계룡시	166	8,239	5,799	5,270	70.4%	64.0%
당진시	669	32,915	25,247	20,858	76.7%	63.4%
금산군	313	15,354	9,241	7,237	60.2%	47.1%
서천군	281	15,461	7,641	5,871	49.4%	38.0%
부여군	322	18,006	11,302	9,260	62.8%	51.4%
청양군	142	8,164	5,359	4,440	65.6%	54.4%
홍성군	362	20,628	12,186	9,671	59.1%	46.9%
예산군	255	11,803	7,724	6,641	65.4%	56.3%
태안군	322	16,841	10,952	9,678	65.0%	57.5%

참고 2

2014년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2014년 실태조사)

구 분	대상기관	설치기준 항목수(A)	설치항 목수 (B)	적정설치 항목수(C)	설치율 (%) (D=B/A)	적정설치율 (%) (E=C/A)	2013년 적정설치율
합계	598	40,182	32,359	27,328	80.5%	68.0%	61.1%
천안시	64	4,358	3,807	3,408	87.4%	78.2%	72.9%
공주시	33	2,409	2,110	1,868	87.6%	77.5%	76.0%
보령시	45	3,184	2,722	2,198	85.5%	69.0%	61.3%
아산시	29	2,290	2,258	1,747	98.6%	76.3%	67.7%
서산시	43	2,816	2,277	1,927	80.9%	68.4%	65.9%
논산시	54	3,287	2,078	1,726	63.2%	52.5%	51.8%
계룡시	16	1,490	1,283	1,145	86.1%	76.8%	73.7%
당진시	33	2,309	2,021	1,823	87.5%	79.0%	70.2%
금산군	32	1,876	1,433	1,039	76.4%	55.4%	47.4%
서천군	53	3,239	2,463	2,036	76.0%	62.9%	51.6%
부여군	45	2,808	1,896	1,489	67.5%	55.4%	39.8%
청양군	36	2,231	1,556	1,339	69.7%	60.0%	59.3%
홍성군	32	2,425	2,181	1,906	89.9%	78.6%	70.0%
예산군	32	2,317	1,868	1,534	80.6%	66.2%	61.7%
태안군	51	3,143	2,406	2,143	76.6%	68.2%	57.3%

<2014년 자체실태조사>

청 사 명	설치기준 항목수(A)	설치항목수 (B)	적정설치 항목수(C)	설치율 (%) (D=B/A)	적정설치율(% (E=C/A)	2013년 적정설치율
계	1,678	1,473	1,282	87.8%	76.4%	71.3%
충남도청	94	94	94	100.0%	100.0%	100.0%
천안시청	86	80	75	93.0%	87.2%	79.1%
천안시 서북구청	87	70	60	80.5%	69.0%	65.5%
천안시 동남구청	87	85	76	97.7%	87.4%	61.4%
공주시청	86	76	72	88.4%	83.7%	82.5%
보령시청	88	78	67	88.6%	76.1%	69.9%
아산시청	100	100	99	100.0%	99.0%	87.2%
서산시청	86	76	68	88.4%	79.1%	79.1%
서산시2청사	80	62	46	77.5%	57.5%	57.5%
논산시청	86	76	51	88.4%	59.3%	59.3%
계룡시청	96	93	86	96.9%	89.6%	83.7%
당진시청	99	93	89	93.9%	89.9%	94.2%
금산군청	84	69	45	82.1%	53.6%	47.5%
부여군청	86	69	56	80.2%	65.1%	48.8%
서천군청	86	62	50	72.1%	58.1%	55.1%
청양군청	83	72	65	86.7%	78.3%	78.3%
홍성군청	94	87	75	92.6%	79.8%	75.6%
예산군청	84	60	49	71.4%	58.3%	57.1%
태안군청	86	71	59	82.6%	68.6%	68.6%

충청남도



충남 복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합동토론회

저출산·고령화정책 문제와 충남의 대응방안

충남발전연구원 김 용 현 책임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충남도의 대응방안

2015년 3월 9일

김용현
(충남발전연구원)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 01. 충남도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 / 3
- 02. 대응 정책 현황 / 10
- 03. 외국의 대응 사례 / 14
- 04. 민선 6기 저출산고령화 정책제언 / 24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01

충남도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

- 01_1 저출산고령화의 후폭풍
- 01_2 저출산의 원인
- 01_3 충남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
- 01_4 충남 고령화의 현황
- 01_5 충남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

01. 충남도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

01_1 저출산고령화의 후폭풍

- 아기 울음소리 사라지는 한국, 신생아수 30년새 반토막 (2013년기준 신생아수 43만명)
- 한국, 13년째 출산율 1.3명 못넘긴 세계 유일한나라(OECD가입국 기준)
- 저출산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출산율이 1.0명이 되면 한 세대가 바뀔때마다 인구가 반으로 준다. 저출산현상을 계속 방치할 경우 그 대가는 자칫 공멸로 나타날 수 있다. (2100년 인구절반, 2700년 지구에서 한국인이 사라짐)
-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화를 맞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할 빈곤노인이 늘어날 가능성과 공적부조 프로그램을 통한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지 모른다.

01. 충남도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



01_2 저출산의 원인 : 결혼연기, 출산감소·기피

- 1) 소득·고용 불안정
 - ▶ 청년실업률 증가, 취업연령 상승
 - ▶ 가정 형성·출산 소극적
- 2) 자녀양육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 ▶ 자녀 양육 및 교육비용 과다
 - ▶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내 육아 지원망 약화
- 3)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 ▶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
 - ▶ 출산여성을 기피하는 조직문화
- 4) 결혼·자녀관 약화
 - ▶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소극적 태도 증가
 - ▶ 전통적 자녀관 약화

[5]

01. 충남도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



01_3 충남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

- 충남도의 저출산 경향은 전국적 추이와 유사하게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2001년 이래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이하)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충남도는 2008년 이후 1.4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3년 기준, 시도별 합계출산율(전국평균1.19)은 전남(1.52명), 충남(1.44명), 세종(1.44명), 제주(1.43명)순으로 충남도의 합계출산율은 전라남도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표 1> 주요 시도별 합계출산율

전국	전남	충남	세종	제주	서울	경기
1.19	1.52	1.44	1.44	1.43	0.97	1.35

- 충남도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1.52에서 2005년 1.26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가 2006년과 2007년도 1.35, 1.5로 상승한 이후 2008년 이후에는 1.4수준을 유지함

[6]

01. 충남도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

01_3 충남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

- 충남도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1.19, 2013)보다 높긴하나 인구대체 수준인 2.1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만혼 및 비혼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을 경우 1.30이하로 크게 반락할 가능성이 있음
- 2013년 기준, 충남도의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16.0%로서 전국 평균 (12.2%)보다 상회하며, 전남(21.4%), 전북·경북(17.5%), 강원(16.4%)이어서 전국 5위임

<표 2> 주요 시도별 고령화율

전국	전남	전북	경북	강원	충남	서울	경기
12.2	21.4	17.5	17.5	16.4	16	10.9	9.7

- 16.0%인 고령인구 비율이 초고령사회인 20%를 초과하는 것은 시간문제임
특히 청양과 서천은 2003년 말 각각 22.0%, 20.3%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2014년말기준 청양 30.9%, 서천 29.8% 으로 주민4~5명 중 1명이 65세이상 노인임

[7]

01. 충남도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

01_4 충남 고령화의 현황

- 부여군 28.0%, 금산군25.4%, 태안군25.2%, 예산24.8% 등 군단위 지역은 모두 고령화 비율이 20%를 넘어서고 있음(2014년말 기준)
- 충남도 고령화 현상의 지역적 특징은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젊은 시군이 전무 하며 고령화사회(7%~14%미만)에 도달한 시군이(3:천안, 아산, 계룡)개가 있고 고령사회(14% ~20%미만)에 진입한 시군이(2: 서산,당진)개가 있고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시군도 청양을 위시, 10개나 해당됨
- 이는 충남도 상당히 고령화가 진척된 상태로, 조만간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가 시군의 주를 이루는 광역도가 될것임

[8]

01. 충남도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



01_5 충남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문제

1) 생산가능인구(15~64세)감소에 따른 충남도 경쟁력 약화

- ▶ 저출산고령화현상의 심화에 따른 도내 생산가능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도내 저축·소비는 물론 도내로의 투자위축 등, 도 경쟁력 저하 및 재정자립도 약화를 초래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2) 고령인구 부양을 위한 도민의 부담 증가

- ▶ 고령화진전에 따라 충남도는 노인 부양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1명을 부양하였으나 2020년에는 3명, 2030년에는 2명이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3) 초고령노인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부담 가중

- ▶ 초고령노인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부담 가중. 초고령인구는 소득의 사회 및 가족 의존도가 높고 심각한 질병이나 장기만성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므로 이들 인구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회경제적 부담도 늘어간다는 것을 의미함

◆ 75세 이상 진료비 : 2004년 1조 7100억 → 2013년 8조 6500억

[9]

02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현황

02_1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현황

02_2 충남도의 저출산 대응 현황

02_3 충남도의 고령화 대응현황

02.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현황



02_1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현황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06년마다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중앙 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함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 ▶ 선택과 집중(만혼과 맞벌이)
 - ▶ 구조적 문제 대응(고용·교육·주거)
 - ▶ 실천·정착에 중점(사회적 여건조성)
 - ▶ 전방위적 고령화 대책 (생산인구 감소대비)
 - 무상보육, 출산비지원 등 예산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노인, 여성 고용 확대와 교육,주거비 부담 완화 등 세대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에 초점

[11]

02.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현황



02_2 충남도의 저출산 대응현황

1) 저출산 관련 시책

- 충남도의 저출산 정책은 크게 경제적 지원과 출산을 위한 사회적 환경개선사업으로 구별할 수 있음. 경제적 지원의 세부항목으로는 보육비·교육비·양육비로 범주화 될 수 있으며 사회적 환경개선은 보육서비스, 교육정책, 보육을 위한 사회분위기 구분 할 수 있음
- 저출산 관련하여 민선5기의 정책 성과
 - ▶ 2011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보육료를 지원하던것을 (만5세이하) 전계층 보육료 지원으로 확대
 -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원장(150천원), 교직원(100천원) 상향지원
 - ▶ 영유아 급·간식비(도:시군→7:3, 도+시군 51억)지원
 - ▶ 15개 시군 투명한 어린이집 시설운영을 위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충남은 경제적 지원에서는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 시행정책이 국무총리 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실적을 내고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하위권 수준), 보육서비스에 대한 품질,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율,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설치비율 등, 사회적 환경 개선사업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

[12]

02.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현황



02_3 충남도의 고령화 대응현황

1) 고령화 관련 시책

- 민선 5기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 ▶ 행복경로당 조성을 통한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
 - ▶ 독거노인공동생활제 운영, 이동 목욕, 빨래차보급,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증가 등을 위한 통한 독거노인·불편노인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
 - ▶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추진
 - ▶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 최근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여 도 차원에서 1·2차에 걸쳐 노인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고령화는 단순한 노인복지 노인복지만의 문제가 아닌 소득·복지, 의료·보건, 산업·노동·주거·여가·교육·문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지만 아직 종합적인 수립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13]

03

외국의 대응사례

- 03_1 프랑스 출산장려정책
- 03_2 프랑스 출산장려정책의 시사점
- 03_3 스웨덴 출산장려정책
- 03_4 선진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03. 외국의 대응사례



03_1 프랑스 출산장려정책

-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프랑스어권 국가들은 자녀양육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에 국가가 적극적 기여
- 프랑스의 경우 1991-1995년 1.71명이던 출산율이 2000년에는 1.89명으로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1.92명으로 다시 증가, 2006년 출산율 2.0명으로 EU회원국 중 가장 높은 출산율 기록중임
 - (1) 이들 국가는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보편적으로 시행
 - (2) 공공보육지원,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수당제공 등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제고를 동시에 고려한 포괄적인 가족정책 실시
 - (3) 셋째아 정책 등 대가족 구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4) 세금감면, 연금 크레딧 제도 등 간접적인 혜택의 적용 확대
 - (5) 동거부부,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을 기초로 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확대

[15]

03. 외국의 대응사례



03_2 프랑스 출산장려정책의 시사점

- 1980년대 심각한 저출산율을 경험한 프랑스가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주요요인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고 있음
- 출산문제를 개인차원이 아닌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였음
- 프랑스의 출산장려 및 가족정책은 정당을 불문하고 역대지도자들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고 이를 위해 자녀출산장려 및 육아에 대한 지원이 GDP의 3%를 차지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적극 실시하였음
- 다자녀를 보유한 가구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개별 부처 차원을 넘어 전 정부부처,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등이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였음

[16]

03. 외국의 대응사례



03_3 스웨덴 출산장려정책

- OECD국가 중 비교적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한 국가는 프랑스와 스웨덴을, 거꾸로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은 국가로는 독일과 일본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프랑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합계출산율이 1.8이상을 유지해 오고 있는 반면, 스웨덴은 한때 합계출산율이 1.5정도까지 하락했다가 현재 회복되어 1.9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큼
- 반대로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아 '저출산의 덫'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17]

03. 외국의 대응사례



03_3 스웨덴 출산장려정책

1) 육아휴직, 부모보험

- 스웨덴에서는 자녀출산 10일 전부터 8세 생일때까지 부모 합계 최대 480일 (노동일수기준)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이중 390일은 휴직 전 급여의 80%가, 그리고 나머지 90일간은 정액의 휴직급여가 지급됨
- 390일중 부모 각각에게 60일의 할당되어 있는데 이는 서로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육아휴직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동일기간 내에는 부모 중 한명만 휴직할 수 있음

[18]

03. 외국의 대응사례



03_3 스웨덴 출산장려정책

- 다만, 출산후 29일은 여성에게 무조건 수급권한이 주어져 이 기간중에는 부모 모두가 휴직할 수 있음
- 만약 다태아일 경우에는 아동 1인당 180일이 추가됨
- 육아휴직은 부모의 사정에 따라 전일, ¾, ½, ¼등의 형태로 조합하여 사용이 가능함
- 여성근로자는 자녀가 1년6개월이 될 때까지 전일제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지위로 복귀함
- 부모보험제도는 육아휴직시 부모의 소득 보전을 위한 것으로 재원은 사업주가 지불하는 사회보험료(지급 급여의 2.2%)로 마련됨

[19]

03. 외국의 대응사례



03_3 스웨덴 출산장려정책

2) 보육지원

- 스웨덴에서는 공보육은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필수요소로 자리하고 있음
- 공공육아시설은 취업모, 독신모, 저소득층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주고 있으나, 0-7세까지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공공육아서비스 이용률은 1975년에서 17%에서 1990년에는 64%로 대폭 증가함
- 스웨덴 보육시설의 주무기관은 1996년 사회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어 취학 전 교육시스템으로 간주되고 있음

[20]

03. 외국의 대응사례



03_3 스웨덴 출산장려정책

3) 수당제도

- 아동수당은 16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첫째아부터 1인당 월 950크로나 (SEK)를 지급(1 크로나 : 132원)
-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지원되어 셋째아는 245, 넷째아는 769, 다섯째아 이상은 월 950 크로나가 더 지급됨
- 이상 부모보험,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 관련 재정지출은 GDP 대비 3.31%를 차지하고 있음

[21]

03. 외국의 대응사례



03_4 선진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 출산율 회복은 하나의 정책만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국가정책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가능함
-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일본이나 한국같은 유교문화권 국가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함께 자아실현을 위한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발전상과 전통적인 역할규범간에 충돌이 불가피해졌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 반대로 오랜기간 동안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어 온 북유럽이나 북어권 국가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22]

03. 외국의 대응사례



03_4 선진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 둘째, 일-가정 양립 제고,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조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 및 출산율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따라서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됨
- 즉, OECD 국가들의 경우, 여성 고용률이 높아야 출산율 역시 높은것으로 밝혀짐 (한국 61.2, 스웨덴 82.5%, 프랑스 76%, 2012년 기준, 여성고용률)
- 저출산 극복 실패 사례
 - ▶ 독일 : 카톨릭문화 영향으로 전통적인 성적분업유지, 여성 취업지원 미비 등으로 인해 저출산 경향 지속
 - ▶ 일본 : 고용에 대한 불안감, 보육시설 부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부재, 정부지원 부족등으로 인해 초저출산 지속
 - ▶ 요컨대 이들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엄격한 성 분업적인 역할 규범이 강조되어 남성은 가계,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

[23]

04

민선 6기 저출산고령화 정책제언

04_1 충남도의 향후 대응 방향 제언

04_2 충남도의 정책방향

04. 민선 6기 저출산고령화 정책제언



04_1 충남도의 향후 대응 방향 제언

- 결혼 자체가 기피되거나 늦어지는 상황에서 기혼가족에 대한 출산지원정책 만으로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 기혼가정의 출산 및 양육비 지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환경조성, 양질의 보육 서비스 확충 등은 기혼가정의 출산 장애요인 완화에만 초점을 둔 정책임
 - ▶ 초저출산은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선진국들의 공통된 현상으로 결혼을 전제로 한 출산문화, 가부장적 유교문화로 인한 성적분업, 비혼화 및 만혼화 등이 주요 원인임
- 이와 동시에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다양한 여가 생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화문제가 향후 대한민국의 생존에 얼마나 중차대 한지에 대한 도민적 인식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또 경험있고 건강한 노인인력을 위한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고령화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임

[25]

04. 민선 6기 저출산고령화 정책제언



04_2 충남도의 정책방향

-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출산 장려에서 결혼장려로
 - ▶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핵심은 '만혼'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듯이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출산 장려에서 결혼장려로 옮겨옴
 - ▶ 출산장려정책을 쏟아내고 보육관련 정책으로 출산을 지원해봐야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거나, 기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
 - ▶ 2014년부터 추진중인 미혼남녀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충남도는 대전에 비하여 늦음)
- 낮은 문화적 수용성의 극복(국민인식전환)
 - ▶ 아시아 선진국들의 기성세대는 동거를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혼외출산은 극히 예외적임
 - ▶ 결혼·출산·양육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혼외출산에 대한 편견 버려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함
 - ▶ 미혼모, 한부모가정, 동거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 법률혼가정과 동등한 법률적 지위 보장 및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26]

04. 민선 6기 저출산고령화 정책제언



04_2 충남도의 정책방향

- 일과 가정의 양립
 - ▶ 한국은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문화를 가지고 있어 정부대책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임
 - ▶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 정책의 방향이 양성이 함께하는 육아문화와 일-가정 양립 가능 기업문화 조성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함
 - ▶ 따라서 보육서비스 공급정책과 더불어 사회문화적인 인식확산과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결혼 및 출산과 자녀양육의 근본적인 장애요인인 교육기간의 장기화, 높은 사교육비, 과도한 대학진학을 등의 사회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 함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충남은 영·유아 1000명당 국·공립 어린이집 수가 1곳(0.94)도 안되고 부여군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음 (프랑스는 3세이상 유아학교는 모두 공립임)

[27]

04. 민선 6기 저출산고령화 정책제언



04_2 충남도의 정책방향

- 비정규직 등 고용이 불안하면 출산율 역시 떨어지므로 20~30대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확보해야 함
- 만혼풍조와 이에 따른 산모의 고령화로 아이 두명을 갖기 힘든 구조이므로 에서 초혼연령을 떨어뜨리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함 (평균 출산연령 32세를 넘어섰고 2014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8.6명으로 '아이 안 낳는'기조가 계속됨)
- 어린이집은 경제활동을 하느라 애 키우기 힘든 사람을 위한 것이므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전업주부 보육료 지원을 줄이고 직장맘 위주로 보육료를 지원해야 함

[28]

04. 민선 6기 저출산고령화 정책제언



04_2 충남도의 정책방향

- **독거노인 증가와 노인복지서비스 문제**
 - ▶ 도의 초고령화추세에 따라 고령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정책개발이 시급함,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 생활밀착체감형복지서비스, 노인, 도시은퇴자 등을 위해 의료·주거·여가·복지 등이 통합된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을 추진해야 함
- **노인빈곤문제와 일자리 대책**
 - ▶ 저출산의 심화에 따른 인구감소시대가 도래할 경우에는 인구구조가 변화여 65세 이상 부부가구, 독거노인가구, 단독세대의 비율이 높아져 충남도가 직면하는 당면과제는 단순히 저소득층의 요구가 아니라 다수가 될 고령자계층의 요구임
 - ▶ 따라서 노인들도 돈을 벌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노령인구는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것임
 - ▶ 지자체에서 정책적 해법은 더 많은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29]

04. 민선 6기 저출산고령화 정책제언



04_2 충남도의 정책방향

- **농어촌 노인복지 기반 확충**
 - ▶ 급속한 고령화진전과 지역별 고령화 수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별로 노인안정생활을 대비하는 종합적인 안목과 미래설계는 미흡한 실정임
 - ▶ 따라서 고령화 정도, 복지수준 및 지역역량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노인복지모델 개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세대간의 활발한 소통을 위한 정책**
 - ▶ 프랑스의 EMSEMBLE 2 GENERATION(2세대간 함께 하기) 결사체(association)처럼 세대간 소통을 위한 기제를 민·관이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2006년 만들어진 이 기독교단체는(노인과 젊은이가 한 집에서 기거하게 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을 씻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둬으로써 2012년 '세대간 연대 유럽 연간 대상'을 수상하였음

[30]



감사합니다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충청남도



충남 복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합동토론회

저소득·취약계층정책 문제와 충남의 대응방안

충남대학교 류진석 교수

저소득·취약계층정책 문제와 충남의 대응방안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일시: 2015. 3. 9(월) 14:00-17:30
- 장소: 충남도청 대회의실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 jsryu@cnu.ac.kr

목 차

- I 서론: 논의배경 및 초점
- II 복지정책의 환경변화와 전망
- III 충남 저소득·취약계층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IV 충남의 대응방안

I. 서론: 논의배경 및 초점

1. 논의배경

▶ 우리 국민의 2012년 행복지수는 OECD 34개 회원국 중 24위, UN의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행복지수는 156개국 중 56위로 나타남. 경제규모로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어도, 우리 국민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한 실정임

그렇다면, 충남도민의 행복지수는?

▶ 충남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며, 수요자중심의 복지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는 충남 복지정책의 대응방향은 무엇인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따뜻한 복지 행복한 충남’**이라는 충남의 복지비전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국가별 GDP규모와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 비교

국 가	GDP ¹⁾		BLI ²⁾	
	규모 ('11년, 10억달러)	순위	점수 (100점만점)	순위
미국	14,991	1	86.4	3
일본	4,408	2	68.3	21
독일	3,308	3	78.7	17
프랑스	2,906	4	74.5	18
영국	2,234	5	81.7	12
이탈리아	1,984	6	67.9	22
멕시코	1,754	7	39.3	33
한국	1,508	8	63.2	24
스페인	1,482	9	71.5	19
캐나다	1,394	10	85.5	6
터키	1,260	11	31.5	34
호주	958	12	87.5	1
폴란드	812	13	58.7	27
네덜란드	721	14	84.6	8
벨기에	427	15	80.9	14
스위스	405	16	85.5	6
스웨덴	392	17	85.8	4

* 1) Annual national accounts, Gross domestic products,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2) www.oecdbetterlifeindex.org 자료 기증

I. 서론: 논의배경 및 초점

2. 논의의 초점

▶ 복지정책의 내용은 분야별, 제도별, 대상별에 따라 다양하며(예, 복지분야의 세부단위사업은 2012년 기준, 297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담당소관부서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이 논의에서는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며, 구체적인 논의의 초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복지정책의 환경변화와 전망은?

둘째, 충남 저소득·취약계층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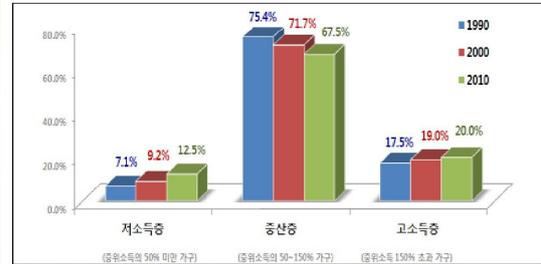
셋째, 충남의 대응방안은?

II. 복지정책의 환경변화와 전망

1. 복지수요의 증가 및 복지욕구의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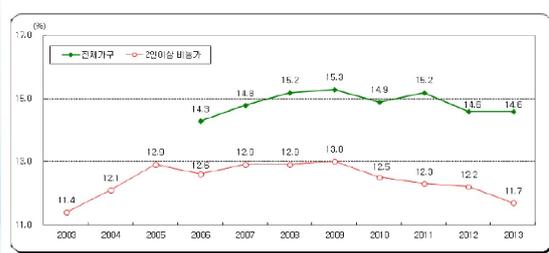
- ▶ 양극화의 심화,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 복지환경의 변화는 복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임
- ▶ 복지사각지대의 축소, 사회적 배제의 극복, 노후보장, 의료, 보육, 장애인의 사회참여 등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될 것으로 전망됨
- ▶ 특히 사회적 위험요인(일자리부족, 노후생활보장의 미흡, 교육비 부담 및 주거불안 등)으로 미래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생활불안을 해소하고 기본욕구충족을 위한 복지제도의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음

[그림 2-10]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1990~2010년,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각년도, 이태진 외, 『공생발전을 위한 보편복지분야의 정책방향』에서 재인용

< 상대적 빈곤율 추이(처분가능소득 기준) >



자료: 통계청(2014), 2014 4분기 가계동향.

II. 복지정책의 환경변화와 전망

- ▶ 가구소득의 분포결과를 보면, 상위소득가구는 2012년에 비해 2013년의 경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취약계층(조손가구, 노인단독가구, 장애인가구 등)의 경우, 가구소득 1,000만원 미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노인가구 59.6%, 조손가구 30.8%, 장애인 가구 27.9%)

- ▶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추이를 고려하면, 향후 생활불안이 가중될 전망이다 (2014년 6월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1,040조원임)

<표 45>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분포¹⁾

구분		전체	1,000만원 미만	1,000-3,000만원 미만	3,000-5,000만원 미만	5,000-7,000만원 미만	7,000-10,000만원 미만	10,000만원 이상
2012년 전체		100.0	12.9	27.9	25.2	15.9	10.8	7.3
2013년 전체		100.0	12.8	25.5	25.6	15.9	12.0	8.1
가구유형별	한부모가구	100.0	9.4	57.6	19.6	7.9	4.2	1.3*
	조손가구	100.0	30.8	42.0	16.9	4.4*	5.8*	-
	노인가구	100.0	59.6	31.4	6.2	1.3	0.9	0.6
	다문화가구	100.0	7.1	34.1	39.6	12.2	4.5*	2.5*
장애인가구		100.0	27.9	33.1	19.9	8.9	6.3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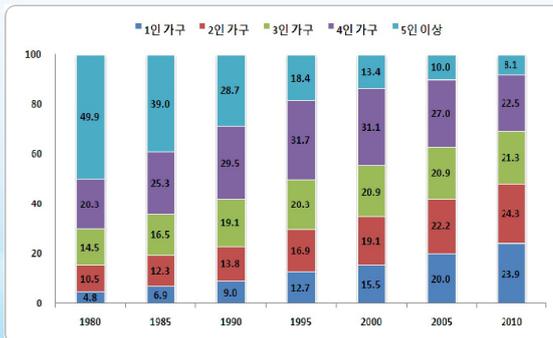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4),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II. 복지정책의 환경변화와 전망

2. 가족부양기능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친화적 정책기반 확충 필요

- ▶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원 돌봄을 위한 전통적 가족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결과, 가족 등 사적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
- ▶ 특히 전통적인 가족형태와는 다르게 한부모가구, 1인가구 등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돌봄기능이 약화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으로 대두되고 있음



구분	1인 가구 구성비(%)				
	2010	2012	2015	2025	2035
전국	23.9	25.3	27.1	31.3	34.3
충남	26.9	28.5	30.6	35.6	39.4

자료: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 2010~2035.

5

II. 복지정책의 환경변화와 전망

3.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보장 기능 강화

-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위기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 계층에 대한 선제적, 예방적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킬 수 있음
- ▶ 생활기능의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노후불안요소를 해소하고, 독거노인, 학대받는 노인 등 취약 노인계층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장애범주의 확대로 장애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의 실질적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지원제도의 확대 및 자립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생활수준 및 기대수준의 향상으로 보편적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와 일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자립능력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음
- ▶ 다문화 가정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통합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응능력 향상이 필요함

6

Ⅲ. 충남 저소득·취약계층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저소득·취약계층 정책의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 ▶ 5종(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지원(기초생활보장급여)
: 2014년 54,799명, 1,521억원 ※ 재원을 :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 ▶ 2013년말 현재, 충남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7%로 나타남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단위: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6	2.0	3.7	3.9	2.5	4.1	2.9	1.3	2.7	1.5	3.6	2.9	2.7	4.8	4.2	3.7	2.7	3.6

주: 수급률 = (지역의 수급자수/지역의 주민등록인구통계)×100
 * 지역의 수급자수 : 시설수급자 포함
 * 지역의 전체인구 : 통계청, 연령별(시도) 주민등록인구(51,141,463명)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7

Ⅲ. 충남 저소득·취약계층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 긴급지원사업의 추진

- ▶ 질병, 화재 등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등 긴급지원으로 위기 상황 해결 및 빈곤으로의 전락 사전예방(선지원 후처리 원칙)
-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가구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의료·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 해산, 장제, 전기요금 등 지원 (*생계, 주거비는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 2014년 9월말 기준 : 3,422가구 2,535백만원 집행
※ 재원을 :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3)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추진

- ▶ 단전·단수·가스 체납자 및 학비·급식비 등 미납가구 조사
- ▶ 긴급지원, 수급자 선정, 민간자원과 연계를 통한 지원
※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대상자 발굴

8

Ⅲ. 충남 저소득·취약계층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4) 자활사업의 추진

-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일을 통한 자립·자활 능력을 향상하여 탈빈곤 유도
- ▶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
 - ※ 2014년 현재, 광역자활센터설치(2014), 지역자활센터 14개소(15개 시군), 자활사업단 114개소, 자활기업 71개소, 사회적 기업/예비사회적 기업 7/6개소.
- ▶ 2014년 9월말 기준, 자활근로사업 참여현황 2, 208명
 - ※ 재원율 :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5)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

-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지원 등
- ▶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입법예고, 다문화 가정 지원 등

9

Ⅲ. 충남 저소득·취약계층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 행복키움지원단의 운영지원

- ▶ 행복키움지원단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으로서 제시된 희망복지 지원단의 충남형으로서, 지역실정에 맞게 구축한 체계임
- ▶ 행복키움지원단은 2012년 상반기에 시군에 설치하였으며, 복지자원개발 및 관리,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방문서비스의 체계화를 전담하는 조직임
- ▶ 통합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해소, 자활·자립지원, 상시 상담채널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지역의 복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사례관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상자의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
- ▶ 2014년도 시군 행복키움지원단 운영지원: 15개시군(97,634천원)
 - ※ 재원율 : 도비 30%, 시·군비 70%
 - (2014년: 325,446천원(도비 97,634천원+시군비 227,812천원))

10

Ⅲ. 충남 저소득·취약계층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3. 저소득·취약계층 정책의 문제점

1) 복지사각지대계층의 생활보장에 대한 충남 자체사업의 방안필요

- ▶ 충남 저소득층 정책 대부분은 법정사업으로서, 중앙정부의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 복지사각지대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독자적인 충남 자체사업은 미흡한 실정임 (※ 지방복지재정의 경직성 및 부담가중으로 자체사업을 수행하기 쉽지 않음)

2) 광역자활센터의 역할정립 및 지역자활센터간의 네트워크 구축 노력 필요

- ▶ 2014년에 광역자활센터가 설치된 관계로, 광역자활센터의 역할 정립 및 사업효과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실정임
- ▶ 광역단위에서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자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자활센터간의 네트워크 구축강화로 사업 효과성 제고에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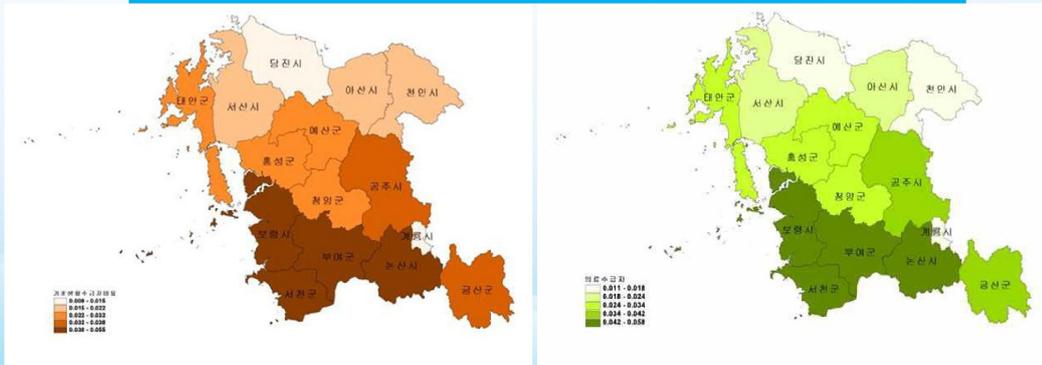
Ⅲ. 충남 저소득·취약계층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3) 복지수요의 지역간 격차의 문제 심화

- ▶ 복지수요자(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의료급여자 등)의 분포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과다 분포된 기초자치단체의 대응능력의 한계
- ▶ 법정복지사업의 자원분담은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수요자 분포에 따른 기초자치단체간 자원부담의 격차 및 그에 따른 타 사업수행의 어려움 등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음

[인구대비 기초수급자 비율분포]

[의료급여수급자 비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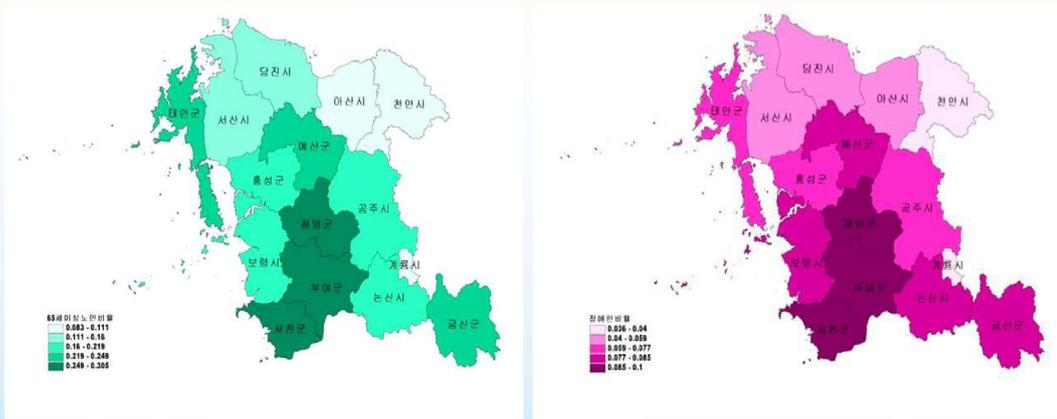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20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Ⅲ. 충남 저소득·취약계층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분포]

[장애인 비율 분포]



자료: 충청남도(20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Ⅲ. 충남 저소득·취약계층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4) 행복키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 행복키움지원단의 구축으로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조직적 틀이 마련되었고, 서비스의 연계와 자원관리의 체계화에 기여함
- ▶ 사례관리의 추진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기능 강화, 고 위험대상자에 대한 광역수준에서 전문적인 지원시스템의 미흡한 실정임
- ▶ 광역단위에서 전문사례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마련을 검토 (예, 타 시도의 경우, 복지재단에서 전문사례관리지원기능 수행)
- ▶ 또한, 사례관리 대상을 발굴한 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례관리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음(2014년 845가구).
 - 그러나 사례관리 사업 운영지원의 재원을(국비 50%, 시군비 50%)을 보면, 도비 지원은 없는 실정임

IV. 충남의 대응방안

- ▶ 저소득층의 정책에서 충남은 기초수급자의 감소,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탈수급률의 향상,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시지원체계로서 행복키움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 ▶ 저소득층의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은 주로 법적 개정이나 중앙정부의 제도개선과 직결되어 있고, 주요 정책의 집행은 시·군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 그 결과, 충남도의 역할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거나 자체사업을 기획하기란 쉽지 않음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기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목적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 등 사업효과성을 높이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 ▶ 한편, 도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비 지원이 전제되어야 함. 도비 지원의 규모 및 지원내용에 의해 정책추진의 범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임

15

IV. 충남의 대응방안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및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2015년 7월 시행)은 과거의 최저생계비 단일기준에서 '중위소득과 연동된 급여별 선정기준의 다층화'가 이루어지며, 부양의 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일선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3%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이하
- ▶ 급여별 주무부처가 변경되고(주거급여-국토부, 교육급여-교육부), 충남도의 경우 주거급여의 업무가 건축도시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사업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노력해야할 것임
 - 따라서 충남도 내에 가칭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실행 TF'를 설치하여 제도개편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대응 및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

16

IV. 충남의 대응방안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및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2014.12.30)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2015.3.2)
- ▶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85%이하로 상향하였으며, 긴급지원의 신청접수를 시군구에서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변경
- ▶ 특히, 생계형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위기 징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의 기준(예,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일정기간 이상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일정기간 이상 체납된 경우 등)을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음. 이와 관련된 조례개정작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복지사각지대의 안전망 역할 및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기가정의 발굴-지원내용간의 연계' 등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선제적인 대응체계의 수립여부'가 중요함
 -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서비스, 자원 연계에 초점 (저소득층 생활보장은 중앙정부의 제도적 접근 + 지방정부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정책적 개입을 집중해야할 것임)

17

IV. 충남의 대응방안

2.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지원체계 수립

- ▶ 행복키움지원단은 공공부문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복합적 복지수요자에 대한 사례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음
- ▶ 그러나 통합사례관리사의 신분보장의 문제,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지원체계 미흡, 연계할 서비스 및 자원의 부족, 일부 지역에서의 지역복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미비 등의 문제점 노출
- ▶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 지원 검토(도비지원 전무함), 자원발굴 및 자원동원을 통한 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강화하고, 도 차원에서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지원
 - 타 시도의 경험을 기초로, '복지재단 설치를 통해 통합사례관리 전문지원체계'를 구축, 또는 '권역별 통합사례관리 전문지원단' 설치 혹은 전문기관의 지정 지원을 적극 검토

18

IV. 충남의 대응방안

3.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확충 및 지역재생프로젝트의 활성화

- ▶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확충
- ▶ 예를 들어, 독거노인의 공동생활제 운영지원(2014년 28개소, 도비 30%+시군비 70%) 및 응급안전돌보미 사업(국비 50%+시군비 50%) 등에 대한 도비 지원확대 검토
- ▶ 빈곤지역 및 취약지역 재생프로젝트 전개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실화
 - 정주환경개선, 복지인프라 확대,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결합된 지역재생프로젝트의 전개로 '살고 싶은 지역사회' 형성
 - 한계마을(인구고령화 및 과소화 마을)에 대한 맞춤형(재편, 재생 등) 정책추진
 - 주민참여 및 문제해결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추진과 내실화

19

IV. 충남의 대응방안

4.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강화

- ▶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임
- ▶ 기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보건복지분야 중 사회적 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지원
- ▶ 도 자체사업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음

20

IV. 충남의 대응방안

5. 지역간 복지격차해소 및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

- ▶ 충남의 경우,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복지수요자의 지역별 분포가 북부지역과 남부지역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 복지수요자의 분포의 지역별 격차심화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 ▶ 따라서 충남도 차원에서의 교부금제도의 개선 등 지역간 복지격차해소 및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및 중장기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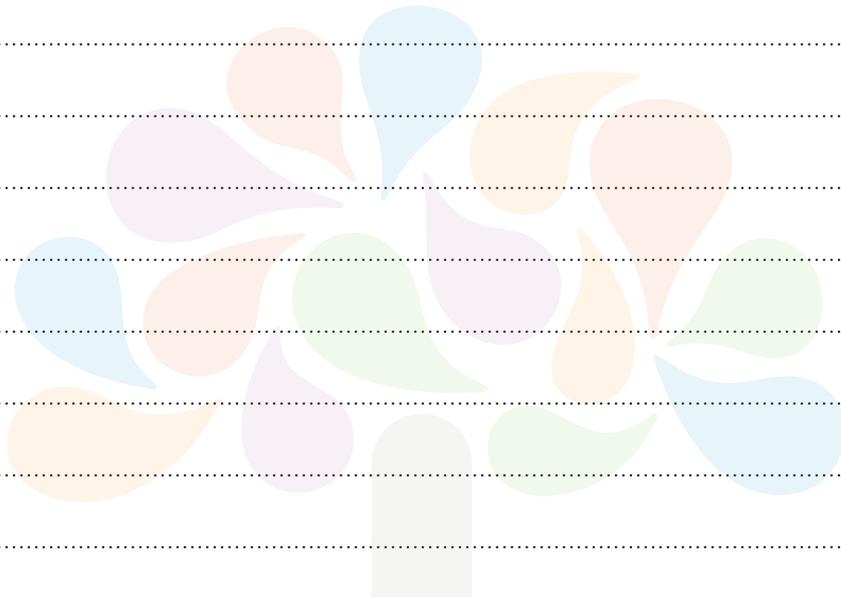


감사합니다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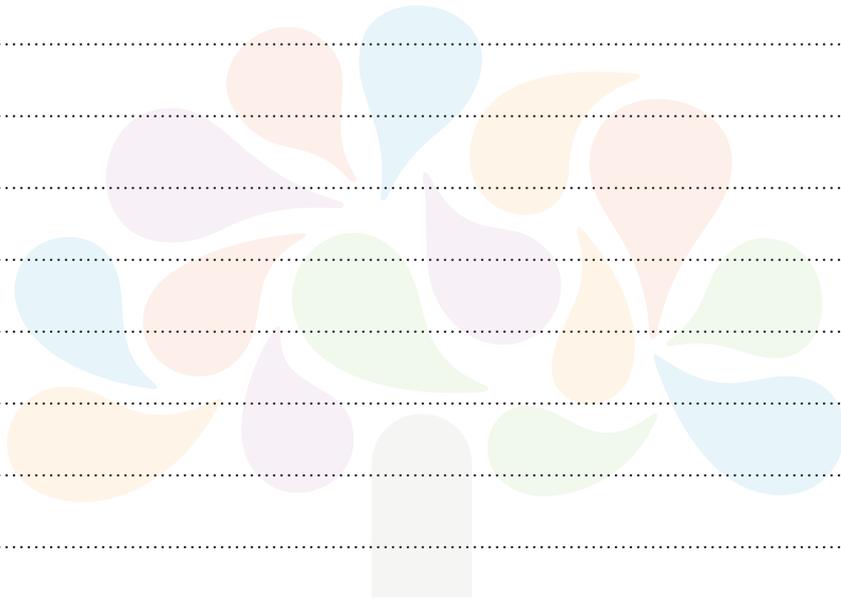
행복충만 충청남도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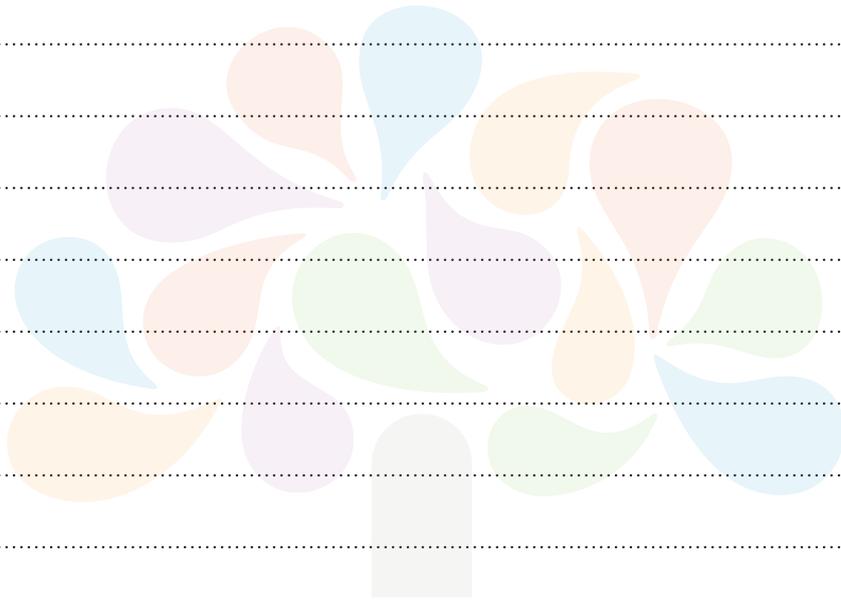
행복충만 충청남도



MEMO



행복충만 충청남도



MEMO



행복충만 충청남도

